

# 중국 기업파산법 및 청산절차 해설

## 머 리 말

지난 '92년 한.중 수교이후 중국은 우리 기업의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어 왔으며, 한국의 많은 대.중소기업들이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은 10%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세계 3 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2 위의 수출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노동, 환경분야 등에서 정책 전환을 강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적 성장과 산업 고도화를 추구하는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우리 진출기업들의 경영여건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해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많은 애로에 봉착해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한계상황에 직면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사업철수시 중국의 기업청산.파산제도가 비록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중국의 『기업파산법』과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한계상황에 직면한 진출기업이 중국내 사업을 원활히 정리하고 철수하는 데 유의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7년 12월  
대한상공회의소

# 목 차

## I 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 해설

### 제1장 총 칙

1. 기업의 채무청산과 정리절차 가능조건은 무엇인가? ..... 1
2. 파산사안의 급별 관할과 지역관할이란 무엇인가? 법원이  
관할권 쟁의를 처리하는 법률근거는 무엇인가? ..... 2
3. 중국 기업파산법에 정한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파산사안을  
어떻게 심리하는가?..... 2
4. 파산기업의 재산이 국외에 있는 경우 국외에 있는 재산에도  
파산절차가 유효하게 적용되는가?..... 3
5. 외국법원이 행한, 법률효력이 발생한 파산사안과  
관련한 판결, 재정이 국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효력 발생여부?..... 3
6. 파산기업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 보장? ..... 4

### 제2장 신청과 수리

1. 정리절차, 화해 또는 파산청산은 누가 신청하는가? ..... 5
2. 채권자,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 ..... 6
3. 파산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가? ..... 7
4. 파산신청이 접수거부 또는 기각 재결을 받은 경우의 대응?..... 7
5. 채무자가 개별로 행한 변제행위는 유효한가? ..... 8
6. 파산신청 수리 전에 성립된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8
7. 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채무자의 채무자 또는  
재산 소지자는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 9
8. 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진행 중에 있는 채무자 관련  
소송 또는 중재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10
9. 파산신청 기각 재결은 어떤 상황에 적용하는가?..... 10

10. 파산법이 법원은 파산신청 수리들 재정하는 동시에 관리자들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11
---	----

### 제3장 관리자

1. 관리자는 누가 지정하고 경질하는가? .....	12
2. 어떤 기구 또는 개인이 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가? .....	12
3. 관리자의 직책은 무엇인가? .....	13
4. 제1차 채권자회의 소집 전에 관리자가 이행해야 하는 법정책임은 무엇인가? .....	14
5. 관리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	15
6. 관리자가 임의로 사직할 수 있는가? .....	16

### 제4장 채무자의 재산

1. 채무자의 재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 .....	16
2.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한 어떤 행위가 무효인가? .....	17
3. 취소 또는 무효행위로 취득한 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19
4.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도한 질물, 유치물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20
5. 운송도중에 있는 표적물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21
6. 청산신청 수리전에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21

### 제5장 파산비용과 공의채무

1. 파산비용? .....	23
2. 공의채무? .....	24
3. 파산비용과 공의채무는 어떻게 변제하는가? .....	25

### 제6장 채권 신고

1. 채권 신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26
------------------------------	----

2. 기한 미만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27
3. 조건부, 기한부 채권과 소송, 중재 미결 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가? -----	28
4. 채권신고 시에는 어떤 자료들 제공해야 하는가?-----	29
5. 연대채권자의 채권신고 방법? -----	29
6.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기타 연대 채무자의 채권신고 방법? -----	29
7. 계약 해지 후 상대방 당사자의 채권신고 방법? -----	30
8. 수탁인의 채권신고 방법? -----	31
9. 어음 지불인의 채권신고 방법? -----	32
10. 채권자가 채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32
11. 채무자, 채권자가 채권 리스트에 기재된 채권에 의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33

## 제7장 채권자회의

1. 채권자회의의 구성? 채권자회의 의장 선임방법? -----	34
2. 채권자회의의 의결방법? -----	35
3. 채권자 위원회 구성과 직권? -----	37
4. 관리자는 어떤 행위들 즉시 채권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가? -----	37

## 제8장 정리절차

1. 기업이 정리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조건? -----	38
2. 정리절차기간에는 누가 기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가? -----	40
3. 정리절차기간에는 담보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	41
4.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가 합법적으로 점유한 타인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42
5.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출자인이 투자수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가?-----	43
6.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이	

소지한 채무자의 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	44
7.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절차 종지들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	44
8. 정리절차 계획초안은 누가 기안하고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가? -----	46
9. 감독기간이 만료된 후 관리자는 어떤 의무들 이행하여야 하는가? -----	46
10.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정리절차계획 집행기간에 권리들 행사할 수 있는가? -----	47
11. 채무자의 보증인 및 기타 연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정리절차 계획의 영향을 받는가? -----	48
12. 채무자가 정리절차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	48
13. 정리절차계획에 따라 감면한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50

## 제9장 화 해

1. 화해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	50
2. 화해 합의서초안이 통과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인가들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 하는가? -----	51
3. 화해합의는 누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가? -----	52
4. 화해채권자가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53
5. 채무자가 화해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 하는가?-----	54

## 제10장 파산청산

1. 파산선고 전에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 파산절차종지들 재결해야 하는가? -----	55
2.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권리자는 어떤 권리들 향유하는가? -----	56

3. 관리자는 파산재산을 어떤 순으로 분배해야 하는가? .....	57
4. 관리자는 수령인이 없는 파산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	59
5. 관리자는 발효조건부 또는 해제조건부 채권을 어떻게 분배하여야 하는가? .....	59
6. 파산재산 분배 시 관리자는 소송, 중재 미결채권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	60
7. 파산자가 분배에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61
8. 파산재산 분배가 완료된 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62
9. 파산자의 등록말소수속은 어떻게 하는가? .....	63
10. 관리자는 어느 시점에서 직무집행을 중지하는가? .....	64
11. 파산절차 중지 후 어떤 상황에서 채권자가 추가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가? .....	64
12. 파산절차 중지 후 파산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 채무자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	66

## 제11장 법률 책임

1. 파산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의 법률책임? .....	67
2. 채무자가 공정 변제를 방해한 경우의 법률책임? .....	68
3. 관리자의 법률 책임? .....	68

## 제12장 부칙

1. 파산법 공포 전에 체불한 종업원의 노임과 기타 비용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69
2. 금융기구의 파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70
3. 기업법인 이외 조직의 파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72

# II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 해설

1.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과 파산법의 관계? .....	75
2. 보통청산과 특별청산의 차이? .....	75
3. 보통청산의 개시일과 청산기한이라 함은 무엇인가? .....	76
4. 기업이 청산기간에 신규 운영업무들 전개할 수 있는가? .....	77
5. 보통청산의 청산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	77
6. 청산위원회 구성원을 경질할 수 있는가? .....	78
7. 청산위원회는 어떤 직권을 행사하는가? .....	79
8. 청산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통지하는가? .....	79
9. 청산위원회의 채권확인 결과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80
10. 어떤 비용을 청산재산에서 우선 지불하여야 하는가? .....	81
11. 청산재산에서 청산비용을 우선 지불한 후 어떤 순으로 변제하는가? .....	82
12. 청산기업의 어떤 행위는 무효인가? .....	82
13. 청산재산의 가격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	83
14. 청산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가? .....	84
15. 기업이 청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진행해야 할 후속작업은 무엇인가? .....	85
16. 특별청산의 개시? .....	85
17. 특별청산위원회는 어떻게 설립하는가? .....	85
18. 채권자회의는 어떻게 소집하는가? .....	86
19. 채권자회의의 직권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87
20. 청산방안과 청산보고서는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가? .....	87

### Ⅲ 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 실무

#### Ⅳ 첨 부

1.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	104
------------------------	-----

2. 외국투자기업 청산관리방법 .....	132
3.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시행 시 심리중인 기업파산안건에 대한 법률적용 약간 문제 규정.....	141
4. 기업파산안건 심리 시 관리인 지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	145
5. 기업파산안건 심리 시 관리인의 보수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	156
 마림강(马林江) 변호사사무소(베이징) 소개 .....	160
《这行字原来的字体为四号，现在改为小四。》	



# I 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 해설

## 제1장 총 칙

### 1. 기업의 채무청산과 정리절차 가능조건은 무엇인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2조** 기업법인이 만기채무들 변제하지 못하고 자산이 채무들 완전 변제하기에 부족 하거나 변제능력이 명확히 결여된 경우 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들 청산한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이나 변제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확연한 기업법인은 이 법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 ◆ 법조문 해석

파산원인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사실적 근거이며 채무자가 법에 따라 파산청산을 진행하고 파산을 예방하는 법률사실이다. 이러한 법률사실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황과 재산상황을 지칭한다. 즉 채무자에게 어떤 경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파산, 화해, 정리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변제불능이란 무엇인가? 변제불능이라 함은 채무자의 변제능력 결여로 만기채무로 변제를 청구한 채무들 지속적으로 전액 변제할 수 없게 된 객관적 경제상태를 지칭한다. 실무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불능을 확정할 경우에는 하기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채무 이행기한이 만료되고 채권자가 변제청구들 한 경우
2. 채무자가 확연히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3. 채무자가 채권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변제불능인 경우
4. 만기채무들 변제하지 못하는 것이 객관적 상태인 경우
5. 채무자의 변제불능 채무가 금전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

재산이 채무들 완전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재산이 채무들 완전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채무자의 자산총액으로 채무들 완전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다. 재산이 채무 완전 변제에 부족함을 확정하는 기준은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로 계산한다. 말하자면 단순 재무요소로 판단한다.

변제능력이 확연히 결여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변제능력이 확연히 결여한 것은 채무자가 만기채무들 변제하지 못하는 조건의 하나이다.

2. 파산사안의 급별 관할과 지역관할이란 무엇인가? 법원이 관할권 쟁의를 처리하는 의거는 무엇인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3조 파산사안은 채무자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 법조문 해석

파산사안의 관할이라 함은 각급 인민법원과 동급 인민법원 간의 파산사안 수리관할의 분할과 그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파산신청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파산법이 채무자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한 것은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파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3. 중국 파산법이 정한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파산사안을 어떻게 심리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4조 파산사안 심리절차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법조문 해석

법원은 파산절차 심리 시에 먼저 파산 절차규범과 실체규범을 규정한 기업파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것은 파산법이 절차규범에서 파산사안의 관할, 파산원인, 신청과 수리, 관리자, 채권신고, 채권자 회의, 정리절차, 화해절차, 파산선고, 파산청산, 파산절차 중지 및 법률 책임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산법이 법원의 파산사안 심리에 필요한 모든 절차들 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증거 관련규정, 소송비용 관련규정, 소송 대리인 관련규정 등은 모두 파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파산사안 심리절차에서 파산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4. 파산기업의 재산이 국외에 있는 경우 국외에 있는 재산에도 파산절차가 유효하게 적용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5조** 이 법에 따라 개시한 파산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밖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도 유효하다.

◆ 법조문 해석

세계 경계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다수 국가의 파산법이 보편주의 입법을 채택해 각국 파산제도 간의 충돌을 조율하고 외국에 있는 재산으로의 공평변제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나가고 있다. 파산절차의 국외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파산법 제5조가 파산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도 유효하다고 규정하였다.

5. 외국법원이 행한 법률효력을 발생한 파산사안 관련 판결, 재정이 국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효력 발생여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5조** 이 법에 따라 개시한 파산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밖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도 유효하다.

법률효력이 발생한 파산사안 관련된 외국법원의 판결, 재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재산과 관련되고 인민법원에 그에 대한 인정, 집행을 신청 또는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공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심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및 사회 공공이익을 손상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지 않으면 파산사안과 관련된 외국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을 재정한다.

◆ 법조문 해석

실무적으로 파산절차의 국외효력을 적용하는 경우, 특히 중국경내 재산에 대한, 중국 경외에서 개시한 파산절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질서 보류원칙과 대등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과 관련조약이나 호혜관계가 없는 국가의 법원이 행한 파산재정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에서 개시한 파산절차로서 중국사회의 공공이익과 배치되는 파산재정은 인정하지 않으며, 경외에서 개시한 파산절차로서 경내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는 파산재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6. 파산기업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 보장?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6조** 인민법원은 파산사안 심리 시에 법에 따라 기업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파산기업 운영 관리자의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 법조문 해석

기업의 파산은 종업원의 실업을 의미하다. 인민법원은 파산사안 심리 시에 법에 따라 기업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1. 파산기업이 체불한 종업원의 임금과 종업원 개인계정에 이체해야 할 기본 사회보험료, 보상비 등 종업원의 채권은 종업원이 채권 신고를 할 필요 없이 관리자가 직접 채권리스트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파산기업의 종업원대표와 노조대표는 채권자회의 또는 채권자 위원회에 참여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 제2장 신청과 수리

### 1. 정리절차, 화해 또는 파산청산은 누가 신청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7조** 이 법 제2조가 규정한 상황이 있는 채무자는 인민법원에 정리절차, 화해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정리절차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 법인이 이미 해산하였으나 청산하지 않았거나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자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법에 따라 청산책임자가 인민법원에 파산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 ◆ 법조문 해석

1. 채권자가 정리절차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한다. 채권자의 정리절차 또는 파산 신청조건은 비교적 간단하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만기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정리절차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이상 채무자의 원인을 막론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2. 채무자가 정리절차, 화해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한다. 채무자는 파산법 제2조가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정리절차, 화해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만기채무들 변제하지 못하고 자산이 채무들 완전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는 2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3. 법에 따라 청산책임이 있는 자가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한다. 기업법인의 해산원인은 여러 가지이며 기업법인이 어떤 원인으로 해산하든지 모두 청산자가 채권과 채무들 청산하게 된다.

2. 채권자,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8조**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파산신청서와 관련 증거들을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자와 피 신청자의 기본상황
- (2) 신청일자
- (3) 신청사실과 이유
- (4) 인민법원이 명기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위에 규정된 자료 외에 자산상황 설명서,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재무회계 관련 보고서, 종업원 안치 예정방안 및 임금지급상황과 사회보험료 납부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 법조문 해석

파산법은, 파산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증거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파산신청자는 파산신청서와 동시에 재산총액이 채무변제에 부족하다는 초보적인 증거들을 제공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신청목적, 즉 정리절차, 화해 또는 파산청산 중 어느 하나를 희망하는가를 명확히 제출해야 한다.

### 3. 파산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9조** 신청자는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신청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법조문 해석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기 전에는 파산신청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파산신청을 취소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허용해야 한다. 신청자가 파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심사하고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실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4. 파산신청이 접수거부 또는 기각 재정을 받은 경우의 대응?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2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접수거부를 재정한 경우 재정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신청자에게 송달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재정에 불복하는 신청자는 재정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인민법원에 상소(上诉)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부터 파산선고 전까지의 심사기간에 채무자가 이 법 제2조가 규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신청기각을 재정할 수 있다. 재정에 불복하는 신청자는 재정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관할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 ◆ 법조문 해석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파산신청 수리, 수리거부, 기각 등의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법원의 파산신청 수리거부에 불복하는 신청자는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기한은 재정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에 불복하는 신청자는 역시 재정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상소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개별로 행한 변제행위는 유효한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6조** 인민법원이 청산신청을 접수한 후에 진행된 개별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무효이다.

◆ 법조문 해석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개별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행위는 여타 채권자의 권익을 해치기 때문에 법률효력이 없다. 개별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행위라 함은 그 채무의 원인이나 만기여부를 불문한 모든 변제행위들 포함한다.

6. 파산신청 수리 전에 성립한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8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자는 파산신청 전에 체결하고 채무자나 상대측 당사자가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해지 또는 계속 이행을 결정하고 이들 상대측 당사자에게 통지할 권한이 있다. 관리자가 파산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상대측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대측 당사자의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리자가 계약의 계속 이행을 결정한 경우 상대측 당사자는 이행해야 한다. 단, 상대측 당사자는 관리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리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 법조문 해석

먼저 관리자가 관련 계약의 계속 이행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관리자는 파산신청 수리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계약의 계속 이행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도 관리자에게 고지하고 관리자의 결정을 독촉할 수 있다. 관리자가 파산신청 수리일로부터 2개월 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가 계약 해지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관리자가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단,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견지에서 상대방 당사자는 관리자에게 담보제공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가 계약 해지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7. 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채무자의 채무자 또는 재산 소지자는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7조** 인민법원이 청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채무자 또는 재산 소지자는 관리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이관해야 한다.

채무자의 채무자 또는 재산 소지자가 고의로 전 항 규정을 위반하고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이관하여 채권자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그의 채무변제 또는 재산이관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법조문 해석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기업은 파산절차에 착수하여 재산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즉시 대외채권을 구상하고, 회수해야 하는 재산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채무자의 자산

총액을 확인하고 채권 채무들 공평하게 정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파산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채무자 및 재산 소지자는 관리자에게 채무들 변제하고 재산을 인계해야 한다. 여기에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이때 채무자의 채무자와 재산 소지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들 변제하거나 재산을 인계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극히 크며 채권자가 손실을 보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자와 재산 소지자가 행한 채무변제나 재산인계 행위는 법률상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8. 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진행 중에 있는 채무자 관련 민사소송 또는 중재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20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이미 개시했으나 종지하지 아니한 채무자 관련 민사소송 또는 중재를 중지해야 한다. 당해 소송 또는 중재는 관리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한 후 계속한다.

◆ 법조문 해석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관리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접수하기 전에 이미 개시하고 종지하지 아니한 채무자 관련 소송과 중재는 중지된다. 파산법의 이 규정은 주로 인민법원이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하는 기간에 소송 또는 중재 방식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9. 파산신청 기각 재결은 어떤 상황에 적용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2조** 기업법인이 만기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자산이 채무들 완전 변제하기에 부족하거나 변제능력이 명확히 결여된 경우 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들 청산한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이나 변제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확연한 기업법인은 이 법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 법조문 해석

파산법 제12조는 “인민법원은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부터 파산선고 전까지의 심사기간에 채무자가 이 법 제2조가 규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신청기각을 재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민법원이 심사에서 채무자가 만기 채무들 변제할 수 있고 재산이 채무들 완전 변제하기에 넉넉하며 변제능력이 명확히 결여하다고 할 수 없음을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기각을 재정하게 된다.

**10.** 파산법은 법원이 파산신청 수리를 재정하는 동시에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3조** 인민법원은 파산신청 접수들 재정함과 동시에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 법조문 해석

관리자 지정은 파산절차에 착수한 후 법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법원이 관리자를 지정하면 관리자가 파산신청 대상인 채무기업의 재산을 집관하고 관리, 지배하며 기업의 계속 운영여부를 결정한다. 관리자는 법원에 의하여 산생하고 법원 앞에 책임지며 활동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관리자는 파산절차가 가동되면서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개입하게 되는 데 이렇게 하면 종전에 파산입법이 파산신청 수리에서 파산선고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관리자가 없던

상태를 극복함으로써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전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 제3장 관리자

#### 1. 관리자는 누가 지정하고 경질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22조** 관리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채권자회의가, 관리자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기타 상황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경질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자 지정 및 관리자 보수 확정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

##### ◆ 법조문 해석

새로 출범한 기업파산법은 관리자를 법원이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전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회의에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결권을 주고 있다. 제22조 제1항은, 관리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채권자회의가, 관리자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기타 상황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경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2. 어떤 기구 또는 개인이 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24조** 관리자는 관련 부문과 기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청산팀이나 법에 따라 설립한 변호사 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파산청산 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가 담당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채무자 실정에 근거하여 사회 관련 중개기구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기구 임직원 중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직업자격을 취득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가 될 수 없다.

- (1) 고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2) 직업자격 증서를 몰수당한 일이 있는 자
- (3) 당해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 (4) 인민법원이 관리자 인선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이 있는 자

관리자를 담당하는 개인은 직업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법조문 해석

관리자 임직조건은 긍정적 조건과 부정적 조건으로 되어 있다. 이른바 긍정적 조건이란 어떤 인선이 관리자를 담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부정적 조건이란 어떤 인선은 담당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다. 파산청산은 많은 법률, 경제, 회계 등의 전문성과 관련한 사무이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기능을 소유한 인재만이 청산작업을 담당할 수 있다. 여기서 자연인이라 함은 완전 민사행위능력이 있고 직업 책임보험에 참가하였으며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전문 개업자격을 취득한 사회 중개기구의 임직원을 지칭한다. 여기에서 사회 중개기구라 함은 법에 따라 설립한, 법률, 회계, 회계감사, 파산청산 등 전문지식을 정통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을 말한다. 관리자를 담당하는 부정적 조건은 고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 관련 전문 개업증서를 몰수당한 일이 없는 자, 당해 사안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 인민법원이 관리자 인선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이 없는 자이다.

### 3. 관리자의 직책은 무엇인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25조** 관리자는 하기 각호의 직책을 이행한다.

- (1) 채무자의 재산, 인감과 장부, 문서 등 자료 인수
  - (2) 채무자 재산상황 조사, 재산상황 보고서 작성
  - (3) 채무자의 내부관리사무 결정
  - (4) 채무자의 일상지출과 필요한 기타 지출 결정
  - (5) 제1차 채무자회의 소집 전에 채무자 영업 계속여부 결정
  - (6) 채무자 재산의 관리와 처분
  - (7) 채무자 대표로서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법률절차 참가
  - (8) 채권자회의 소집제의
  - (9) 인민법원이 관리자가 이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직책.
- 이 법이 관리자의 직책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을 준용한다.

◆ 법조문 해석

관리자는 주로 다음 사항에 기재된 업무들 이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장부, 문서, 자료 등을 인수한다.
2.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정리, 처분한다.
3. 운영 관리권을 이행한다.
4. 채무자들 대표하여 소송 또는 중재에 참여한다.
5. 파산재산을 현금화하고 분배한다.

이 밖에 새로 출범한 파산법은 기타 조문에서도 관리자의 일부 직책을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파산절차 전에 재산양도, 만기 전 채무 변제, 채권포기 등 행위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하고 재산을 구상할 권한이 있으며 파산기업의 이사, 사장 및 기타 책임자가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비정상 소득과 점유한 재산을 회수할 권한이 있고 법원이 채무자의 정리절차를 재정한 경우 정리절차 계획초안을 기안하는 것 등이다.

**4. 제1차 채권자회의 소집 전에 관리자가 이행해야 하는 법정책임은 무엇인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26조** 관리자가 제1차 채권자회의 소집 전에 채무자의 영업 계속여부를 결정하거나 이 법 제69조가 규정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하는 때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조문 해석

제1차 채권자회의 소집 전에 관리자의 하기 행위는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 채무자의 영업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 (2) 토지, 가옥 등 부동산 관련 권익을 양도하는 경우
- (3) 황산 탐사권, 황산 채취권,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 (4) 전부의 재고품 또는 운영을 양도하는 경우
- (5) 차입금을 내는 경우
- (6)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 (7) 채권과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 (8)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 (9)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 (10) 담보물을 인출하는 경우
- (11) 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처분 관련 기타 행위를 행하는 경우.

5. 관리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28조** 관리자는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관리자의 보수는 인민법원이 확정한다. 채권자회의가 관리자의 보수에 대하여 이의를 가지는 경우 인민법원에 제의할 권한이 있다.

◆ 법조문 해석

관리자의 보수는 채권자의 이익과 직결된다. 관리자의 보수들 너무 높으면 파산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하게 되고 너무 낮게 정하면 전문수준이 보다 높은 관리자들 선임하기 어렵다. 채권자와 관리자의 이익을 같이 돌보기 위하여 인민법원이 파산사안의 실정을 감안하여 관리자의 보수들 결정한다. 채권자회의가 법원이 확정된 관리자의 보수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이 결정한 보수가 곧 관리자의 보수이며 채권자회의가 관리자의 보수에 이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제의하고 법원이 채권자회의의 의견을 감안하여 다시 결정한다.

6. 관리자가 임의로 사직할 수 있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29조**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하지 못한다. 관리자의 사직은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법조문 해석

법원이 일단 관리자를 선정한 후에는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하지 못한다. 사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가령 관리자가 직무 수행 중 근면하게 직무들 다 하지 못하고 직책에 따른 관리의무를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해 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자 취소결정을 한다.

## 제4장 채무자의 재산

1. 채무자의 재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30조** 파산신청 접수 시에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전부, 그리고 파산신청 접수 후부터 파산절차 종지 전까지의 기간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이다.

◆ 법조문 해석

채무자의 재산이라 함은 파산사안 수리 시 채무자에 속한 전부의 재산 및 파산사안 수리 후 파산절차 종지 전까지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는 다음 사항에 규정된 재산이 포함된다.

1. 파산사안 수리 시 채무자에 속한 전부의 재산. 채무자에 속한 전부의 재산이라 함은 파산신청 수리 시 채무자에 속한 전부의 재산 또는 운영 관리하는 전부의 재산을 지칭하며 여기에는 기업의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망라한다. 유형재산에는 기업의 생산수단, 공장건물, 경영 장소, 기계시설 등의 고정재산과 유동자금을 포함한다. 재산권리에는 채권과 무형재산 예하면 기업의 특허, 상표, 기업이 소지한 주권과 종권을 포함한다.

2. 파산신청 수리 후 파산절차 종지 전까지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이 재산에는 (1) 파산기업의 채무자가 주동으로 변제하였거나 관리자의 독촉에 의하여 변제한 채무, (2) 파산기업의 재산을 소지한 자가 주동으로 인제하였거나 관리자의 독촉하여 인제한 재산, (3) 계약의 계속 이행으로 취득한 수익, (4) 파산기업의 투자 또는 그가 소유한 지적재산권으로 취득한 수익, 파산기업이 취득한 기증, 배상 등 합법적 수익, (5) 기타 원인으로 취득한 합법적 재산 예하면 파산기간에 정부의 조달금 등이다.

2.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한 어떤 행위가 무효인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33조** 채무자 재산관련 아래에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 (1) 채무 포탈을 위한 재산 은닉, 이전
- (2) 채무 허구, 또는 허위채무 인정.

◆ 법조문 해석

1. 파산사안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 한 무효행위.

(1) 채무도피를 위한 재산 은닉, 이전행위. 파산사안에서 재산은 은닉이라 함은 주로 채무자의 이사, 감사, 사장 또는 기타 책임자가 채무도피를 위하여 고의로 파산기업의 재산을 은닉하여 관리자가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리자가 재산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여 실지 인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사안에서 재산이전이라 함은 주로 채무자의 이사, 감사, 사장 또는 기타 책임자가 채무도피를 위하여 고의로 채무자의 재산을 여타 장소에 이전하거나 자금을 인출하여 여타 제정에 예치함으로써 관리자의 통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채무를 허구하거나 부실채무를 인정하는 행위. 채무허구는 일반적으로 계약, 차입금 증빙 등 허위 내용의 채무증빙을 날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파산사안에서 채무허구는 주로 채무자의 이사, 감사, 사장 또는 기타 책임자가 고의로 허무한 내용의 채무증빙을 날조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증가하는 것이다. 부실채무 인정은 주로 채무자의 이사, 감사, 사장 또는 기타 책임자가 고의로 사실상 불명확한 채무를 확인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진실성을 감추는 것을 말한다.

새로 출범한 기업파산법은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관리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하고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상황 보고서들 작성하고 채무 리스트를 편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채무도피를 위하여 재산을 은닉, 이전하고 채무를 허구하거나 부실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관리자의 채무자 재산인수들 통한 법에 따른 직무이행을 방해하고 파산절차의 정상적 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

며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히 손상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은 상기 행위는 무효행위로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 2. 무효행위가 확인된 후의 법률적 결과

채무도파를 위한 재산의 은닉, 이전 및 채무허구 또는 부실채무 인정이 인민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면 시초부터 무효로 된다. 부분 무효인 경우에는 기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기타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

3. 취소 또는 무효행위로 취득한 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34조** 관리자는 본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가 규정한 행위들 통해 취득한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할 권한이 있다.

#### ◆ 법조문 해석

새로 출범한 기업파산법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취소 또는 무효 행위들 통해 취득한 채무자의 재산은 관리자가 회수할 권한, 즉 회수권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회수권이라 함은 파산신청 수리 전의 법정기간 내에 실시한, 공평변제 원칙에 배치되고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손상하는 재산처분은 법에 따라 관리자가 인민법원에 당해 재산 회수들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관리자가 회수할 권한이 있는 재산에는 무상양도로 취득한 재산, 명확히 불합리한 저가거래로 취득한 재산, 원래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 제공으로 취득한 재산, 기간 미만 채무의 사전변제로 취득한 재산, 채무자의 채권포기로 취득한 재산, 개별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로 취득한 재산, 재산은닉방식으로 취득한 재산, 재산이전방식으로 취득한 재산, 허위채무방식으로 취득한 재산, 부실채무 인정방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도한 질물, 유치물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37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자는 채무변제 또는 채권자가 접수하는 담보제공을 통하여 질물과 유치물을 회수할 수 있다.

전항이 규정한 채무변제 또는 담보대체 시 질물 또는 유치물의 가치가 담보목적 채권 액보다 적은 경우 당해 질물과 유치물의 당시 시장가치에 한한다.

◆ 법조문 해석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질물이나 유치물을 점유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접수하는 기타 대체물을 제공하여야만 채무자가 질물이나 유치물을 회수할 수 있다. 질물이나 유치물의 가치가 채권자의 담보대상 채권 액보다 많은 경우 관리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접수하는 기타 담보들 제공하고 질물이나 유치물을 회수할 수 있다. 질물이나 유치물의 가치가 채권자의 담보대상 채권 액보다 적은 경우 질물이나 유치물의 당시 시가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거나 담보들 제공하고 질물이나 유치물의 시가와 채권자의 채권 액과의 차액은 채권자가 무담보 채권으로 채권신고들 하게 해야 한다.

◆ 사례 분석

예들 들어 파산신청 수리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30만원 가치의 자동차를 질물로 제공하고 20만원의 차관을 받았다면 채무자들 께 신청자로 하는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관리자는 채권자의 채권 20만원과 그 이자를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접수하는 대체물로 담보들 제공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질물인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다. 가령 인민법원이 채무자들 께 신청자로 하는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당해 질물인 자동차의 시가가 15만원에 불과하다면 관리자는 15만원의 가치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거나 이를 대체로 담보를 제공하고 질물인 자동차를 회수하며 채권자가 변제 받지 못한 5만원은 채권자가 무담보채권으로 채권신고할 수 있으나 우선 변제권은 향유하지 아니한다.

#### 5. 운수도중에 있는 표적물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39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할 때 매출자가 표적물을 매입자인 채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채무자가 접수하지 못하고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자가 운송 도중에 있는 표적물을 회수할 수 있다. 단, 관리자가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매출자에게 표적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 법조문 해석

매도인의 회수권은 새 기업파산법이 매출자의 이익을 적당히 보호하기 위해 정한 특별규정이다. 매도인은 다음 2개 조건에 부합하여야 회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첫째로, 매입자측의 파산신청 시에 매도인이 이미 화물을 발송하였으나 매입자측이 인수하지 못하였으며 둘째로, 매입자측이 화물의 대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관리자가 매도인측에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표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6. 청산신청 수리 전에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40조** 파산신청 접수 전에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무는 관리자에게 채무상쇄를 주장할 수 있다. 단, 하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쇄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신청 접수 전에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타인의 채권인 경우.

(2) 채권자가, 채무자가 만기채무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 또는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단, 채권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또는 파산신청 1년 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는 예외이다.

(3) 채무자의 채무자가, 채무자가 만기채무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 또는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채권을 취득한 경우. 단, 채무자의 채무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또는 파산신청 1년 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채권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이다.

◆ 법조문 해석

파산신청 수리 전에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무는 관리자에게 채무상쇄를 주장할 수 있다. 즉 쌍방의 상등한 채권액과 채무액을 소멸할 수 있다. 단 새 파산법은 세 가지 상황은 상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첫째로,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신청 수리 후에 채무자에 대한 타인의 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무를 상쇄하지 못한다. 둘째로, 채권자가, 파산신청자가 만기채무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 또는 파산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채권자는 당해 채무의 채권과의 상쇄를 주장하지 못하며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법률의 규정 또는 파산신청 1년 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채권자가 상쇄를 주장할 수 있다. 셋째로, 채무자의 채무자가, 채무자가 이미 만기채무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 또는 파산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타인의 파산채권을 매입하였거나 직접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취득하였는가를 막론하고 상쇄하지

못한다. 다만 법정 원인, 이들에면 상속, 채무자의 권리침해행위 또는 부당한 이윤취득으로 취득한 채권이거나 파산신청 1년 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취득한 채권만이 상쇄할 수 있다.

상쇄권 행사시에 유의할 바는 파산채권자가 상쇄권을 주장하는 경우 파산분배방안 공시 전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파산분배방안 공시 후에 상쇄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쇄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쇄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

## 제5장 파산비용과 공익채무

### 1. 파산비용이라 함은 무엇인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41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에 발생한 하기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파산비용이다.

- (1) 파산사안의 소송비용
- (2) 채무자 재산의 관리, 현금화 및 분배비용
- (3) 관리자의 직무 집행비용과 보수 및 직원 초청비용.

#### ◆ 법조문 해석

파산비용은 파산자의 재산에서 지불하며 다음과 같은 3개 부분을 포함한다. 첫째, 파산사안의 소송비용. 여기에는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건수리비용 및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감정, 회계감사, 공시, 통역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둘째, 채무자 재산의 관리, 현금화, 분배비용. 관리비용이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리, 보관 등 행위로 발생한 비용을 말하며 현금화 비용이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 경매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하며 채무자재산 분배비용이라 함은 공시비용, 통지비용, 인출비용을 포함한 파산재산 분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유의할

바는 채무자의 재산 관리, 현금화 활동에서 법에 따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역시 파산비용에서 선불되었다는 점이다.

## 2. 공의채무라 함은 무엇인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42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에 발생한 하기 각호에 해당하는 채무는 공의채무이다.

- (1) 관리자나 채무자가 양측이 모두 이행을 필하지 아니한 계약의 이행을 상대방에 청구하는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
- (2) 채무자의 재산이 관리자의 책임 이외의 원인으로 입은 손실의 채무
- (3) 채무자의 부당한 이윤으로 발생한 채무
- (4) 채무자의 계속영업을 위하여 지불한 노동보수와 사회보험료 및 이로 하여 발생한 기타 채무
- (5) 관리자 또는 관련자의 직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의 손상을 초래하여 발생한 채무
- (6) 채무자의 재산이 타인의 손상을 초래하여 발생한 채무.

### ◆ 법조문 해석

1. 관리자나 채무자가 양측이 모두 이행을 필하지 아니한 계약의 이행을 상대방에 청구하는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 이미 성립된 쌍무 계약으로서 파산사안 수리 시에 채무자는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하는 지급의무와 손해배상은 파산재산에 속하며 상대방은 이행하였으나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재산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속한다. 예를 들어 쌍방이 다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 기업파산법에 따라 관리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계속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관리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 계약의 계속이행으로 발생



하는 채무는 공의채무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우선 변제해야 한다.

2. 채무자의 재산이 관리자의 책임 이외의 원인으로 입은 손실의 채무. 관리자의 책임 이외라 함은 법정 또는 약정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손실을 면하기 위하여 실시한 관리나 서비스들 말한다. 파산절차 개시 후 관리자의 책임이외로 관리들 실시하여 채무자의 재산손실을 방지하는 것은 전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관리자가 책임이외의 관리들 실시하여 지불한 비용은 공의채무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한다.

3. 채무자의 부당한 이윤으로 발생한 채무. 파산절차 개시 후 채무자가 합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타인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당해 부당이익의 채무들 공의채무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변제해야 한다.

4. 채무자의 영업계속을 위하여 지불한 노동보수와 사회보험료 및 이토 하여 발생한 기타 채무.

5. 관리자 또는 관련자의 직무집행으로 타인의 손상을 초래하여 발생한 채무.

6. 채무자의 재산이 타인의 손상을 초래하여 발생한 채무.

### 3. 파산비용과 공의채무는 어떻게 변제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43조** 파산비용과 공의채무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수시로 변제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비용과 공의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파산비용을 우선 변제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비용 또는 공의채무들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비율에 따라 상환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파산절차

종지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파산절차 종지를 재정하고  
공시해야 한다.

◆ 법조문 해석

수시로 변제한다는 것은 파산비용과 공의채무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수시로 지불하여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산절차에서 파산비용, 공의채무, 파산채무는 모두 채무자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한다. 새 기업파산법 제113조 규정에 따르면 파산재산을 각 파산채권자에게 분배하기 전에 먼저 파산비용과 공의채무를 청산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비용과 공의채무 전액을 청산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먼저 파산비용을 청산하고 그 나머지로 공의채무를 청산한다. 만일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비용의 일부 또는 공의채무의 일부만을 청산할 수 있는 경우 청산비용 또는 공의채무에 비율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비용과 공의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함을 발견한 경우 각 채권자는 파산재산에서 어떤 변제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파산절차를 계속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지 재정을 청구해야 한다.

## 제6장 채권 신고

### 1. 채권신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45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의 채권신고 기한을 확정하여야 한다. 채권신고 기한은 인민법원 파산신청 접수 공시일로부터 기산하고 최소 30일 이상, 최고 3개월 이내로 한다.

◆ 법조문 해석

채권신고기한이라 함은 법원이 정하거나 인민법원이 허용하는, 채권신고들 수리해서부터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채권신고기한은 채권신고의 유효여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채권신고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향유자가 파산절차에 참여하고 당사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조건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향유하는 채권자가 채권신고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충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가 파산절차에 참여하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즉 당해 채권자는 파산절차의 당사자로 될 권한이 없고 채권자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없으며 표결권, 이의권, 파산분배 접수권이 없다.

파산법은, 채권신고기한은 인민법원 파산신청 접수일의 의일부터 기산하고 최소 30일 이상, 최고 3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기한 미만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46조** 비 만기채권은 파산신청 접수와 동시에 만기로 간주한다.  
금리 부가채권은 파산신청 접수와 동시에 금리계산을 중지한다.

◆ 법조문 해석

인민법원이 파산사안을 수리한 후 채무자에 대하여 향유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만기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기채권만이 대방에 대한 이행, 강제집행 청구권이 발생하며 만기되지 아니한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파산절차에 진입한 후에는 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자가 인수하였고 채무자는 당해재산을 불법 처분하지 못하며 채권의 기한이 만기되어도 의무이행을 보증할 수 없게 되었다.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한 후에는 파산재산에 한하여 변제한다. 가령 만기되지 아니한 채권이라 하여 신고들 불허한다면 이 부분 채권자에게는 매우 공평하지

못하다. 따라서 파산법은 만기되지 아니한 채권을 향유하는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파산사안을 수리한 후 채권신고들 통하여 파산사안 당사자의 지위를 취득하며 파산재산에 대한 구상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였다.

3. 조건부, 기한부 채권과 소송, 중재 미결 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47조** 조건부채권, 기한부채권, 소송·중재 미결채권은 채권자가 신고할 수 있다.

◆ 법조문 해석

파산법은 조건부, 기한부 채권과 소송, 중재 미결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조건부 채권이라 함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채권이 성립되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이 불확정상태에 있는 채권을 말한다. 기한부 채권이라 함은 기간 만기 시에 채권이 성립되고 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채권이 불확정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소송, 중재 미결채권이라 함은 비록 채권은 존재하지만 쌍방이 쟁의가 발생하여 법원이나 중재기구에 교부하였으나 미결인 것을 말한다. 이런 채권도 법원이나 중재기구가 판결 또는 재결을 하기 전까지는 역시 불확정상태에 있다.

상기한 채권은 모두 불확정상태에 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 진입한 이상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일단 인민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모든 채권자들 대상으로 분배하게 되므로 파산법은 불확정 채권의 채권자도 채권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사안 당사자의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였다.

#### 4. 채권신고 시에는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49조** 채권자의 채권신고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액수와 재산담보의 유무를 설명함과 동시에 관련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연대채권 신고는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 ◆ 법조문 해석

파산법에 따르면 채권신고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채권자는 채권의 액수, 연대채권의 유무, 재산담보의 유무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재산담보가 있는 경우 관련 증거를 제공하고 연대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설명을 해야 한다.

#### 5. 연대채권자의 채권신고 방법?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50조** 연대채권은 대표자 1명이 채권자 전체를 대표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채권자 전체가 공동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 ◆ 법조문 해석

합명관계나 합동관계는 연대권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채권을 신고한다. 즉

1. 그중 1명이 채권자 전원을 대표하여 채권을 신고한다.
2.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채권을 신고한다.

#### 6.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기타 연대채무자의 채권신고 방법?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51조**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기타 연대채무자가 채무자들 대리하여 채무들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으로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기타 연대채무자가 채무자 대리하여 채무들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미래 구상권으로 관리자에게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단, 채권자가 관리자에게 채권전액을 신고한 경우는 예외이다.

◆ 법조문 해석

보증인이 채무자들 대신하여 채무들 변제한 경우 변제한 액수 범위 내의 채권을 신고할 권한이 있다. 인민법원이 파산사안을 수리하기 전까지 보증인이 채무자들 대신하여 채무들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재산 분배에 참가하며 채권자가 일단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인이 채무보증 액수 범위 내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분배에 참가할 수 있다.

7. 계약 해지 후 상대측 당사자의 채권신고 방법?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53조** 관리자 또는 채무자가 이 법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대측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실 배상청구권으로 채권을 신고한다.

◆ 법조문 해석

파산법에 따르면 이행 완료하지 아니한 계약은 인민법원이 파산사안을 수리한 후 관리자나 채무자가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계약해지로 하여 상대방에 손실을 조성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손실을 배상하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파산법은 파산절차에 진입한 후 채무자가 개별 채권자들 상대한 채무변제들

허용하지 않으므로 계약 해지 후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실배상 청구들 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 8. 수탁인의 채권신고 방법?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54조** 채무자가 위탁계약의 위탁인이고 이 법 규정을 준용하기로 개정하였지만 당해 수탁인이 모르고 계속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수탁인은 이로 발생한 청구권으로 채권을 신고한다.

### ◆ 법조문 해석

위탁계약은 위탁인과 수탁인이 계약약정을 통해 수탁인이 위탁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계약이다.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별도의 규정을 하였거나 위탁사무의 성격상 종지할 수 없는 경우들 제외하고 위탁인 또는 수탁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파산의 경우 위탁계약은 종지된다. 위탁계약은 쌍방의 신임을 바탕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위탁계약의 위탁측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산과 기타 사무를 관리자가 관리하고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관리자와 원 위탁계약의 위탁측이 상호 신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이므로 위탁계약은 법에 의하여 종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위탁인과 수탁인이 모두 위탁계약에서 약정한 권리들 향유하지 않고 위탁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수탁인이 위탁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정보들 접하지 못하였고 위탁인이 파산한 사실을 알 길이 없었으며 계속 선의로 위탁인의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위탁인은 수탁인이 위탁인의 사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고 이로 하여 발생한 채무들 부담해야 한다. 즉 수탁인은 위탁인에게 이로 하여 발생한 채무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때 위탁인이 이미 파산을 선고하였으므로 수탁인은 위탁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

## 9. 어음 지불인의 채권신고 방법?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55조** 채무자가 어음발행인이고 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적용하기로 재정하였으며 당해 어음지불인이 계속 지불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지불인은 이로 하여 발생한 청구권으로 채권을 신고한다.

### ◆ 법조문 해석

환어음이나 수표는 모두 타인(일반 지불인과 수표 예금업무들 취급하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 포함)에 위탁하여 확정된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환어음이나 수표 발행인과 지불인의 관계는 지불인이 지불한 금액 및 그로 하여 발생한 비용을 발행인이 부담해야 한다. 환언하면 지불인은 발행인에게 관련 금액과 비용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파산법은 채무자가 어음 발행인이고 파산법절차를 적용하기로 재정하였으며 당해 어음 지불인이 지불하고 인수하였다면 지불인은 이로 하여 발생한 청구권으로 채권을 신고한다고 규정하였다.

10. 채권자가 채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56조** 인민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파산재산 최종분배 전에 보충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 전에 이미 진행된 분배는 보충 분배하지 아니한다. 보충 신고한 채권확인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보충 신고자가 부담한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이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 ◆ 법조문 해석



채권자가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진입하여 권리들 행사할 기회들 상실하지만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파산법은 이런 채권자에게 만회할 기회들 주었다. 파산법은 이러한 채권자의 채권은 파산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전제하에서 채권을 보충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보충 신고한 채권은 기한 내에 신고한 채권과 구별된다. 첫째로는, 파산재산 최종분배 전에 신고해야 하고 둘째로는, 그에 대한 변제는 신고 후에 남은 재산에 한한다. 파산재산 분배는 일차로 할 수도 있고 수차에 나누어 할 수도 있으므로 수차에 나누어 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기 전에 이미 파산재산을 분배하였다면 보충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전에 분배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 신고한 후부터 분배에 참가할 수 있다. 셋째로는, 보충 신고한 채권도 심사,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 확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채권신고자가 부담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채권자는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산재산 최종분배 전에 보충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파산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들 행사하지 못한다. 즉 채권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며 일부 사항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의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파산재산 분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1. 채무자, 채권자가 채권리스트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58조** 이 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채권그래프는 제1차 채권자회의에 회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권그래프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확인한다.

채권그래프에 기재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무자와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 ◆ 법조문 해석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한 후 그 채권의 성립여부, 채권 액의 정확여부, 채권의 성격 등 문제들 심사하고 확인하여야 채권자가 파산절차의 당사자지위들 확실하게 취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진입하여 권리들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채권리스트가 결정한다. 따라서 파산법은 채권리스트 검사, 확정 절차들 규정하였다.

첫째로, 채권리스트 검사권은 채권자회의가 행사한다. 둘째로, 채권리스트 확정권은 인민법원이 행사한다. 인민법원이 채권리스트들 확정한 이상 채무자나 채권자가 채권리스트에 대한 이의들 표시하여도 파산절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쟁의가 있는 당사자는 쟁의채권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해 소송은 파산사안을 수리한 인민법원이 수리한다. 당해 소송이 파산절차 최후분배단계까지 미결인 경우 관리자가 당해 쟁의채권이 분배받아야 하는 몫을 인출하여 보관하였다가 사건 심리를 완료한 후에 확정된 채권에 따라 분배한다.

## 제7장 채권자회의

### 1. 채권자회의의 구성? 채권자회의 의장 선임방법?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59조**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채권자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채권자회의에 출석할 권리가 있고 표결권을 향유한다.

미확정 채권의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그의 표결권 행사를 위한 채권 액을 임시 확정 한 외에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채권자로서 우선상환권을 보기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제61조 제1항 제7호, 제10호가 규정한 사항의 표결권을 향유하지 못한다.

채권자는 대리인을 위임하여 채권자회의에 출석하고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채권자회의에 출석하는 대리인은 인민법원 또는 채권자회의 주식에게 채권자의 수권위임장을 제시해야 한다.

채권자회의는 채무자의 종업원과 노조대표가 참가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게 해야 한다.

**제60조** 채권자회의는 주식 1명을 두며 인민법원이 표결권을 향유하는 채권자 중에서 지정한다.

채권자회의는 채권자회의 의장이 집행한다.

#### ◆ 법조문 해석

채권자회의는 파산절차에서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대표하는 의사표시기관이므로 물론 채권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채권자의 채권이 무 재산담보 채권이거나 재산담보 채권이거나를 막론하고, 액수를 확정된 채권이거나 액수 미정 채권이거나 관계없이, 법률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는 누구나 채권자회의의 구성원이 되어 채권자회의에서 자기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파산절차에서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모두 채권자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채권자회의에서 자기의견을 발표할 수 있지만 모든 채권자회의의 구성원이 다 채권자회의의 범위 내의 모든 의결사항에 대한 표결권을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1.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유한권리를 향유하는 채권자는 표결권이 없다.

2. 채권을 확인할 수 없는 채권자는 표결권이 없다.

#### 2. 채권자회의의 의결방법?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64조** 채권자회의의 결의는 회의에 출석한, 표결권을 소지한 채권자 과반수로 통과하고 그들이 대표한 채권 액이 무 재산담보 채권총액의 1/2 이상을 점하여야 한다. 단, 이 법이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는 예외이다.

채권자가, 채권자회의 결의가 법률규정에 위배되고 그의 이익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권자회의가 의결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결의 취소를 재정하고 채권자회의의 의법 재의결을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회의의 결의는 전체 채권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 ◆ 법조문 해석

파산절차에서 채권자회의를 두는 취지는 전체 채권자에게 적당한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체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자회의의 어떤 의결이나 모두 채권자회의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 일부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익의 손상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자회의가 통과한 의결에 대하여 이익을 제출하고 당해 의결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채권자회의 의결의 취소를 제출할 수 있는 이유는, 채권자회의 의결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여기에는 의결의 실제내용이 기업파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을 포함한다.

2. 인민법원에 채권자회의 의결취소재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채권자에는 표결 시에 채권자회의 의결에 대한 이익을 표시하고 기권한 채권자와 채권자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익이 있는 채권자를 포함한다.

3. 채권자회의 의결취소재정 신청은 채권자회의 의결 통과일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채권자회의 의결 취소여부는 인민법원이 검토하여 당해 의결취소 또는 신청기간 재정을 한다. 당해 재정은 상소하지 못한다.

인민법원이 채권자회의의 의결취소재정을 한 경우 채권자회의에 재의결을 명하여야 한다.

### 3. 채권자 위원회 구성과 직권?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67조** 채권자회의는 채권자위원회 결성을 결의할 수 있다. 채권자위원회는 채권자회의가 선임한 채권자대표와 채무자의 종업원대표 또는 노조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채권자위원회 구성원은 9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채권자위원회 구성원은 인민법원이 서면결정으로 인가해야 한다.

#### ◆ 법조문 해석

“채권자회의는 채권자위원회 결성을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채권자위원회는 필히 설립해야 하는 법정기구가 아니며 설립여부는 채권자회의가 스스로 결정한다. 파산재산의 액수가 비교적 적고 채권자가 비교적 적은 파산사안은 채권자위원회를 설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권자위원회는 채권자회의의 대표기구로서 그 구성원은 채권자회의가 결정한다, 기업파산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위원회 구성원은 채권자회의가 법정 표결절차에 따라 채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종업원대표나 노조(즉 공회)대표 1명이 있어야 한다. 채권자위원회 인수는 9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관리자는 어떤 행위를 즉시 채권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69조** 관리자의 하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즉시 채권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1) 토지, 가옥 등 부동산 권의 양도행위
  - (2) 황산 탐사권, 채취권, 지적재산권 등 재산권 양도행위
  - (3) 재고품 또는 영업 전반 양도행위
  - (4) 차입금 차입행위
  - (5) 재산담보 설정행위
  - (6) 채권과 유가증권 양도행위
  - (7) 채무자와 상대측이 모두 이행을 필하지 아니한 계약 이행행위
  - (8) 권리 포기행위
  - (9) 담보물 회수행위
  - (10) 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기타 재산 처분행위.
- 채권자위원회들 결성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자의 전항의 행위들 즉시 인민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조문 해석

파산법의 이 조항은 관리자가 채권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을 상세히 열거하였다. 사실상 이것은 채권자위원회가 감독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을 구체화한 것이며 관리자의 견지에서 감독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 제8장 정리절차

### 1. 기업이 정리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조건?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2조** 기업법인이 만기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자산이 채무들 완전 변제하기에 부족하거나 변제능력이 명확히 결여한 경우 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들 청산한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이나 변제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확연한 기업법인은 이 법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제70조** 채무자나 채권자는 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정리절차들 직접 인민법원에 신청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청산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부터 채무자의 파산을 선포하기 전까지 채무자 또는 출자액이 채무자 등록자본금의 1/10 이상을 점하는 출자인이 인민법원에 정리절차들 신청할 수 있다.

#### ◆ 법조문 해석

정리절차가 파산변연에 이른 기업 또는 파산의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을 만회하는 특별 법률제도의 하나이므로 물론 어떤 기업이나 다 정리절차들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조건과 절차들 갖추어야 정리절차들 가동할 수 있다.

기업이 정리절차들 가동시킬 수 있는 기본조건은, 첫째로, 기업법인이 만기채무들 변제하지 못하고 자산이 채무들 완전 변제하기에 부족하거나 변제능력이 확연하게 결여하며, 둘째로, 변제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리절차들 가동시키자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정리절차는 채무자, 채권자, 출자액이 채무자 등록자본금의 1/10 이상을 점하는 출자인을 포함한, 법률이 규정한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정리절차들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수리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정리절차들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정리절차들 신청할 수 있다.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채무자의 출자인은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정리절차들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정리절차 신청은 채무자 소재지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리절차 신청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정리절차신청서에는 신청자

와 또 신청자의 기본상황, 신청 사실과 이유 및 기타 필요한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셋째, 반드시 관련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에면 신청자의 주  
체자격 증명서, 신청자의 법정대표자나 주요 책임자 성명,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증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  
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이밖에 재무상황 설명서, 채무리스트, 채권리  
스트, 재무회계보고서, 종업원 안치방안 및 종업원의 노임지급상황  
과 사회보험료 납부상황 등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 2. 정리절차 기간에는 누가 기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73조** 정리절차 기간에 채무자가 신청하고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으면 채무자가 관리자의 감독 하에 자체로 재산을 관리하고 영업  
사무를 진행할 수 있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  
산과 영업사무를 인수 관리하는 관리자는 재산과 영업사무를 채무  
자에게 이관하고 이 법이 규정한 관리자의 직책은 채무자가 행사한  
다.

**제74조** 재산과 영업사무 관리책임을 부담한 관리자는 채무자의  
경영관리직원을 초청하여 영업사무를 책임지게 할 수 있다.

### ◆ 법조문 해석

파산법이 정리절차제도를 내은 목적은 기업에 재생의 기회를 주  
기 위한 것이므로 정리절차기간 기업의 관리와 운영이 각별히 중요  
하다. 파산법 규정에 따르면 정리절차기간에는 기업의 관리와 운영  
을 관리자가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으면 채무자가 자  
체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도 있다. 어째서 채무자가 자체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하면 주요하게는 채무자의 운영관리 층  
이 기업의 재산상황과 운영상황을 더 잘 알고 있고 회사의 문제점



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자신이 나서면 기업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관리자는 채무자의 관리와 운영 행위를 감독함으로써 정리절차기간의 운영관리가 정리절차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관리자가 정리절차 기간의 기업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운영관리인원을 초청하여 운영관리활동을 책임지게 할 것이다. 그것은 기업의 운영관리는 전문 지식과 기능이 있어야 하며 특히 기업의 업무를 숙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관리인원에게 운영관리를 맡기면 기업의 정리절차에 참여하는 그들의 열성을 동원하는 데도 유리하다.

### 3. 정리절차기간에는 담보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75조**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특정재산 담보권 향유자는 잠시 담보권 행사를 중지한다. 단, 담보물의 손상 또는 가치의 현저한 절하가 가능하여 담보인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보인이 인민법원에 담보권 행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 또는 관리자가 계속 영업을 위해 차입금이 차입할 경우 당해 차입금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 ◆ 법조문 해석

첫째, 정리절차기간에 기존의 담보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정리절차기간에는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향유하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을 포함한 담보권이 제한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기업이 파산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의 주요 재산에 모두 담보권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담보권 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저당물로서의 기계설비와 공장건물을 저당권자가 매각하는 경우 기업은 생산경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아무런 의의도 없게 되며 채권자의 전반 이익도 손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담보물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담보권자의 권리들 손상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담보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정리절차기간에 신규 담보권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기업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리절차기간의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정리절차기간에 있는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에 비하여 자금유통이 더 어렵다. 차입금이 필요하지만 대출측은 채권보장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정리절차기간에 있는 기업에 담보제공을 요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정리절차기간에 계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정리절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파산법은 관리자나 채무자가 계속운영을 위하여 차관이 필요한 경우 담보설정을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다.

4.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가 합법적으로 점유한 타인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76조** 채무자가 타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당해 재산 권리자가 정리절차기간에 회수하려 하는 경우에는 원 약정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법조문 해석

재산 회수권은 채무자가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그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법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자가 정리절차기간에 당해 재산을 회수할 권리들 행사하려 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법 규정에 따르면 정리절차기간에 회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하기 3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첫째, 권리자가 회수하는 재산이 권리자의 소유인 동시에 임대, 사용, 대출, 기탁, 가공수주, 대리 매입, 대리 판매 등의 원인으로 채무자가 점유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회수하는 재산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그 재산이 이미 훼손된 경우 권리자는 채무자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셋째, 권리자가 회수하려할 경우에는 전에 약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한 경우에는 재산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5.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출자인이 투자수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77조**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출자인은 투자수의 분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은 그가 소지한, 채무자의 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단,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 법조문 해석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 출자인의 투자수의분배권은 제한을 받는다. 출자인으로서 투자수의 분배를 취득하는 것은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그 권리행사는 법률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정리절차에 진입한 채무자는 이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고 재산이 채무를 완전 변제하기에 부족하거나 변제능력이 확실하게 결여하거나 변제능력을 현저하게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처지이므로 설사 정리절차기간에 운영상황이 호전되어 보다 좋은 생산수입을 취득하였다 해도 먼저 채무를 변제하고 결손을 벌충하여야 하지 수입을 직접 투자자에게 분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리절차기간에 출자인은 투자수의분배를 청구하지 못한다.

6.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이 소지한 채무자의 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77조**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출자인은 투자수의 분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은 그가 소지한, 채무자의 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단,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 법조문 해석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의 주식양도권은 제한된다.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은 모두 회사의 경영관리자이면서 많은 경우에는 또 기업의 주주이므로 그들은 기업의 운영상황과 직접 관련되며 기업에 충성하고 근면할 의무를 지고 있다.

회사법에 따르면 주주는 지분을 양도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이 자기들이 소지하고 있는 채무자의 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채무자에 대한 시장투자자의 신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주가의 심한 하락으로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정리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파산법은 인민법원의 동의를 없는 한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이 정리절차기간에 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유의할 바는 파산법이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 사이의 지분양도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7.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리절차를 종지를 재정보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해야 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78조** 정리절차 기간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 또는 이해 관련자가 청구하면 인민법원이 정리절차 종지들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

(1) 채무자의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만회할 가망성이 적은 상황

(2) 채무자가 사기 또는 악의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한 기타 행위들 하는 상황

(3) 채무자의 행위로 하여 관리자의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상황.

◆ 법조문 해석

정리절차 종지라 함은 정리절차기간에 인민법원이 법률이 규정한 원인으로 하여 관리자나 기타 관련자의 청구에 따라 정리절차들 종지하는 것을 말한다. 하기 3종 상황이 법률이 규정한 상황에 해당한다.

첫째, 채무자의 운영상황과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만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정리절차기간에는 채무자의 운영상황과 경제상황이 원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되거나, 계속 악화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채무자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만회할 수 없는 상황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리절차들 종지해야 한다.

둘째, 채무자가 사기, 악의적인 재산 감소 등 채권자에게 확실히 불리한 행위들 행하는 경우. 이에 속하는 행위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1. 재산을 은닉 불법분배, 무상 양도하는 행위
2. 재산을 비정상적인 저가로 매출하는 행위
3. 원래 없었던 재산담보들 제공하는 행위
4. 기한 미만인 채무 변제행위
5.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

셋째, 채무자의 행위로 하여 관리자가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산법의 규정에 따르면 정리절차기간에 관리자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악의로 관리자의 직무집행을 저해하거나 소극적으로 관리자의 직무집행을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자가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다.

8. 정리절차 계획초안은 누가 기안하고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80조** 채무자가 자체로 재산과 영업사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작성한다.

관리자가 재산과 영업사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작성한다.

◆ 법조문 해석

정리절차기간에 재산관리와 운영사무를 책임지는 자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기안한다.

9. 감독기간이 만료된 후 관리자는 어떤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91조** 감독기간 만료 시에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감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관리자의 감독직책이 중지된다.

정리절차계획 이해관련자는 관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감독보고서를 조회할 권리가 있다.

관리자가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정리절차계획 집행 감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법조문 해석

파산법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정리절차계획 기준을 재정한 날로부터 정리절차계획이 정한 감독기간 내에는 관리자가 정리절차계획을 집행하며 채무자는 정리절차계획 집행상황과 기업의 재무상황을 관리자 앞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기간 만료 후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감독보고서들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는 채무자의 보고와 감독집행상황에 근거하여 감독보고서들 작성하고 감독보고서에서 정리절차계획의 제반내용에 대한 집행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일반상황에서 관리자는 감독보고서들 제출한 날로부터 감독 직무를 해제한다. 그러나 정리절차계획 집행이 원래 예기한 것보다 더욱 복잡해지는 등 정리절차계획 집행에 대한 감독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겠다고 인정하는 특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자가 인민법원에 정리절차계획 집행에 대한 감독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감독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정리절차계획 집행에 대한 감독기간 연장을 재정할 수 있다.

10.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정리절차계획 집행기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92조** 인민법원이 인가를 재정한 정리절차계획은 채무자와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모두 구속력을 가진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정리절차계획 집행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정리절차계획 집행을 필한 후 정리절차계획이 규정한 동일 유형 채권 변제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향유하는 권리는 정리절차계획으로 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법조문 해석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은 정리절차기간에 제한을 받으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채권신고는 파산제도의 중요한 절차로서 그 목적은 될수록 파산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신고 관련 파산법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는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이 확정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11. 채무자의 보증인 및 기타 연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정리절차계획의 영향을 받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92조** 인민법원이 인가를 재정한 정리절차계획은 채무자와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모두 구속력을 가진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정리절차계획 집행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정리절차계획 집행을 필한 후 정리절차계획이 규정한 동일 유형 채권 변제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향유하는 권리는 정리절차계획으로 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법조문 해석

정리절차계획의 효력은 채무자의 보증인 및 기타 연대 채무자에 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보증인 및 기타 연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채권자의 채권 액수, 변제조건에 대한 정리절차계획의 조정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채권자는 언제나 원래의 액수와 조건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다.

12. 채무자가 정리절차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93조** 채무자가 정리절차계획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리자 또는 이해관련자의 청구에 따라 정리절차계획 집행을 중지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정리절차계획 집행중지를 재정한 경우 정리절차계획에서 한 채권조정을 위한 채권자의 약속은 효력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정리절차계획 집행으로 받은 변제는 유효하며 채권에서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파산재산으로 한다.

전항이 규정한 채권자는 동 순위의 기타 채권자가 그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은 후에 계속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이 조 제1항이 규정한 상황은 정리절차계획 집행에 제공한 담보에도 계속 유효하다.

◆ 법조문 해석

정리절차계획은 채무자나 관리자가 작성하고 인민법의 비준을 받은, 법률효력을 가진 문서이다. 정리절차계획은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제이므로 채무자가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관리자 또는 이해 관련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리절차계획 집행중지를 재결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

채무자가 정리절차계획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장상황의 변화 등 채무자의 잘못이 아닌 원인으로 정리절차계획을 집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정리절차계획을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 전체 또는 일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기한과 액수에 따라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개별 채권자에 편향적으로 변제함으로써 그들에게 계획외의 이익을 주고 기간을 앞당겨 변제하거나 감면하여야 하는 데도 전액을 변제하는 등 정리절차계획이 정한 내용에 따라 집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정리절차계획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는 데는 정리절차계획 전반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일부분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 다수 채권

자에 대하여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개별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정리절차계획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불문하고 정리절차계획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한 채무자가 정리절차계획의 목표들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13. 정리절차계획에 따라 감면한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94조** 정리절차계획에 따라 감면한 채무는 정리절차계획 집행을 완료한 후부터 채무자가 더는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 법조문 해석

정리절차계획 집행을 완료한 시점에서 정리절차계획에 따라 채무들 감면한 채무자는 변제의무가 면제된다. 환언하면 정리절차계획에 따라 감면한 채무는 정리절차계획 집행 완료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리절차계획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당해 채무는 계속 유효하다.

## 제9장 화 해

### 1. 화해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95조** 채무자는 이 법 규정에 따라 직접 인민법원에 화해들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화해들 신청할 수도 있다.

화해들 신청하는 채무자는 화해 합의서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 법조문 해석

첫째로, 어떤 조건에서 화해들 제출할 수 있는가?

채무자의 파산원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화해들 신청할 수 있다.

둘째로, 누가 화해들 신청할 수 있는가?

채무자만이 법원에 화해들 신청할 수 있을 뿐 채권자는 화해들 신청하지 못한다. 그것은 채무자가 화해성의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화해합의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화해신청을 제출하는 시점은, 1. 파산사안 수리 전에 파산사안 수리 전 화해신청을 제출하고 2. 파산사안 수리 후 파산선고 전에 파산선고 전 화해신청을 제출한다.

2. 화해합의서 초안이 통과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99조** 채권자회의 표결에서 화해합의서초안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권자회의에서 통과한 화해합의서초안이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화해절차 종지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

◆ 법조문 해석

먼저 파산절차에서의 화해합의의 특징을 알아보기로 하자. 파산절차에서의 화해합의는 일반 민사화해와는 다른 특수형태의 민사합의이다. 첫째, 이 화해합의는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이 화해합의는 강제성 화해제도이다. 일단 채권자회의가 법정 다수로 채무자의 화해합의를 통과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화해합의 내용에 대한 이의를 주장한 소수 채권자도 화해합의의 구속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합의는 채권자회의가 통과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채권자회의는 어떤 상황에서 얼마의 채권자가 찬성하여야 화해합의를 통과할 수 있는가? 파산법 규정에 따르면 회의에 출석한, 표결권이 있는 채권의 채권자 과반수로 통과하여야 하며 무재산담보 채권총액에서 그들이 대표하는 무 재산담보 채권 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채권자회의가 화해합의를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법원이 심사하여 인가하지 아니한 경우 화해합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화해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민법원이 화해절차 종지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

### 3. 화해합의는 누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00조** 인민법원이 재정하여 인가한 화해합의는 채무자와 화해채권자 전체에게 모두 구속력을 가진다.

화해채권자라 함은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는 때 무 재산담보권 향유하는 채권자들 지칭한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화해채권자는 화해합의 집행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화해합의 집행 완료 후에 화해합의서가 규정한 변제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1조** 채무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 책임자에 대하여 화해채권자가 향유하는 권리는 화해합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02조** 채무자는 화해합의서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제106조** 화해합의에 따라 채무를 감면한 경우 채무자는 화해합의 집행을 필한 시점부터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 법조문 해석

효력을 발생한 화해합의는 법률효력을 가진다. 그러면 화해합의는 누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가?

첫째, 화해합의는 모든 화해채권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화해채권자라 함은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는 시점에 채권자에 대한 무 재산담보 채권을 향유하는 채권자, 즉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화해합의는 재산담보 채권자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들은 인민법원이 화해합의들 인가한 후에 권리들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담보물을 집행하는 경우 기업운영이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담보채권자와 별도로 화해합의들 보아야 한다.

둘째, 화해합의는 물론 채무자에 대하여도 법률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화해합의서가 규정한 방식, 기간, 액수에 따라 채무들 변제해야 한다.

셋째, 화해합의는 채무자의 담보인 및 기타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말하자면 화해합의가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기한연기, 면제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지만 화해채권자는 원래의 약정이나 법률규정에 따라 보증인과 연대 채무자에 대한 권리들 행사할 수 있다.

4. 화해채권자가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00조** 인민법원이 재정하여 인가한 화해합의는 채무자와 화해채권자 전체에게 모두 구속력을 가진다.

화해채권자라 함은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는 때 채무자에 대한 무 재산담보채권을 향유하는 채권자들 가리킨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화해채권자는 화해합의 집행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화해합의 집행 완료 후에 화해합의서가 규정한 변제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법조문 해석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일반채권자는 화해절차에 진입하지 못하며 따라서 포괄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화해절차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라 하여 채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화해합의서 집행을 완료한 후 화해합의서가 규정한 변제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화해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04조** 채무자가 화해합의를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화해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화해합의 집행종지령을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화해합의 집행종지령을 재정한 경우 화해채권자가 화해합의 시에 한 채권조정 약속은 효력을 상실한다. 화해채권자가 화해합의 집행과정에 향유한 채권변제는 유효하고 화해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전항이 규정한 채권자는 여타 채권자가 자기가 변제받은 비율과 동등한 비율까지 변제받은 후부터 계속 변제받을 수 있다.

이 조 제1항이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화해합의 집행에 제공한 담보는 계속 유효하다.

◆ 법조문 해석

화해합의 집행과정에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화해합의를 집행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화해합의를 집행하지 못하거나 모두 채권자

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파산선고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채권을 계속 행사하는가? 화해채권자가 화해합의에서 한 채권조정 관련 약속은 채권자가 채권을 양보하는 약속이며 이런 약속은 채무자가 화해합의를 완전히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채무자가 화해합의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파산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한 경우 채권자가 화해합의에서 한 양보 이들에면 일부 종류의 채무면제, 변제액 감소, 변제기간 연기 등 약속은 무효하며 채권자는 원 채권 액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화해합의에 따라 이미 변제받은 채권 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한 경우 채무자가 화해합의에 따라 행한 변제는 유효하다. 변제받은 채권자는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나머지 미변제채권은 파산채권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그리고 화해합의 집행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는 이로 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것은 화해합의가 파산자의 파산청산을 모면하고 채권자회의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보하는 방법으로 달성한 합의이기 때문이다. 제3자가 화해합의의 성립과 집행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는 채무자가 화해합의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공한 담보이다. 채무자가 화해합의 규정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화해합의에 담보를 제공한 제3자는 법에 따라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제10장 파산청산

1. 파산선고 전에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 파산절차종지를 재결해야 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08조** 파산선고 전에 하기 각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절차 중지들 재정하고 공시해야 한다.

- (1) 제3자가 채무자에게 충분한 담보들 제공하였거나 또는 채무자의 만기채무들 전액 청산한 상황
- (2) 채무자가 만기채무들 전액 상환한 상황.

◆ 법조문 해석

파산법 제108조는 파산선고 전에 하기 각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절차 중지들 재정하고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1) 제3자가 채무자에게 충분한 담보들 제공하였거나 또는 채무자의 만기채무들 전액 청산한 상황
- (2) 채무자가 만기채무들 전액 상환한 상황.

2.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권리자는 어떤 권리들 향유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09조** 파산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권리자는 당해 특정재산에 대한 변제우선권을 향유한다.

◆ 법조문 해석

파산법제109조는 파산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권리자는 당해 특정재산에 대한 변제우선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파산법 제110조는, 이 법 제109조가 규정한 권리들 향유하는 채권자가 변제우선권을 행사하고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한다. 변제우선권을 포기한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파산법 제109조와 제110조는 별제권(別除權) 제도를 규정하여 파산자의 특정자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향유하는 권리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향유한다고 하였다.

별제권은 파산법이 새로 성립한 권리가 아니라 민법의 담보물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별제권은 재산 담보물권의 채권과는 많이 다르다. 별제권은 재산담보에 따른 채권뿐만 아니라 공유물에 부담한 채권과 법률이 규정한 기타 별제권의 채권까지 포함한다. 별제권의 표적물은 반드시 파산자 소유의 재산이어야 하며 별제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는 담보물권이다.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담보물권의 표적물은 파산자의 재산일 수 있고 제3자 소유의 재산일 수도 있다. 담보표적물이 제3자 소유의 재산인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향유하는 담보물권은 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이 아니라 민법상 담보물권에 한한다. 반대로 파산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 기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당해 채권자가 파산자의 채권자가 아닐지라도 당해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을 향유한다. 별제권은 파산자의 특정재산에 한하여 행사한다. 담보물권의 표적물이 멸실하는 경우 담보물권의 소멸과 함께 당해 표적물에 대하여 향유하는 별제권자의 별제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는 우선변제권이다.

### 3. 관리자는 파산재산을 어떤 순으로 분배해야 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13조** 파산재산은 파산비용과 공의채무를 우선 변제한 후 하기 각호가 나열한 순위로 변제한다.

(1) 파산자가 체불한 종업원의 노임과 종업원 의료·상이 보조금, 위자료, 체불한, 종업원 개인제좌에 불입하여야 하는 기본 양로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및 법률, 행정법규가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상금

(2) 파산자가 체불한, 전호 규정 이외의 사회 보험료와 파산자가 체불한 세액

(3) 일반 파산채권.

파산재산이 동일 순위의 채무들 변제하기 부족할 경우 동일 비율로 분배한다.

파산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의 임금은 당해 기업 종업원의 평균노임으로 계산한다.

#### ◆ 법조문 해석

파산법 제113조는, 파산재산은 파산비용과 공의채무들 우선 변제한 후 하기 각호가 나열한 순위로 변제한다.

(1) 파산자가 체불한 종업원의 노임과 종업원 의료·상이 보조금, 위자료, 체불한, 종업원 개인제좌에 불입하여야 하는 기본 양로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및 법률, 행정법규가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상금

(2) 파산자가 체불한, 전호 규정 이외의 사회 보험료와 파산자가 체불한 세액

(3) 일반 파산채권.

파산재산이 동일 순위의 채무들 변제하기 부족할 경우 동일 비율로 분배한다.

파산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의 임금은 당해 기업 종업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와 상제권자가 별제권과 상제권을 행사하는 외 나머지 재산으로 우선 파산비용을 지불하고 공의채무들 변제하여야 하며 그리고 남은 재산을 파산재산으로 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분배함으로써 파산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파산채권 변제 시에는 먼저 제1순위의 채권을 변제하고 나머지로 제2순위의 채권을 변제하며 그 나머지를 기타 채권자에게 분배해야 한다. 파산재산이 동일 순위의 채권을 완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변제해야 한다. 즉 당 순위 채권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배하

여야 한다. 예를 들면 파산재산으로 제1순위와 제2순위의 채권을 변제하고 100만원이 남았고 제3순위의 채권총액이 200만원이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채권당 평균 20%라면 채권당 100만원 급하기 20%, 20만원씩 변제해야 한다.

#### 4. 관리자는 수령인이 없는 파산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18조**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분배액은 관리자가 인출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최종분배 공시 일로부터 만 2개월이 지나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배 수령권리 포기로 간주하고 관리자나 인민법원이 인출한 분배액을 기타 채권자에게 분배해야 한다.

##### ◆ 법조문 해석

파산법 제118조는,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분배액은 관리자가 인출해야 한다. 채권자가 최종분배 공시 일로부터 만 2개월이 지나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배 수령권리 포기로 간주하고 관리자나 인민법원이 인출한 분배액을 기타 채권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5. 관리자는 발효조건부 또는 해제조건부 채권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17조** 관리자는 발효 조건부 또는 해제 조건부 채권의 분배액을 인출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전항 규정에 따라 분배액을 인출하는 경우 최종분배 공시 일에 발효조건에 미달하였거나 해제조건에 도달하였다면 기타 채권자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최종분배 공시 일에 발효조건에 도달하였거나 해제조건에 미달하였다면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법조문 해석

파산법 제117조는, 관리자는 발효 조건부 또는 해제 조건부 채권의 분배액을 인출해야 한다.

관리자가 전항 규정에 따라 분배액을 인출하는 경우 최종분배 공시 일에 발효조건에 미달하였거나 해제조건에 도달하였다면 기타채권자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최종분배 공시 일에 발효조건에 도달하였거나 해제조건에 미달하였다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파산재산 분배방안은 발효조건부채권, 해제조건부채권 및 미래행사 청구권에 대한 법적 제척기간을 확정하고 그 기간은 파산재산 분배공시 후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분배에 참가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배에 참가하지 못한다.

6. 파산재산 분배 시 관리자는 소송, 중재 미결채권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19조** 파산재산 분배 시에 소송이나 중재 미결채권은 관리자가 그 분배액을 인출하여야 한다. 파산절차 종지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인출한 분배액을 기타채권자에게 분배해야 한다.

◆ 법조문 해석

파산법 제119조는, 파산재산 분배 시에 소송이나 중재 미결채권은 관리자가 그 분배액을 인출하여야 한다. 파산절차 종지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인출한 분배액을 기타 채권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소송이나 중재 미결채권이라 함은 당사자가 채권에 쟁의에 대하여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였고 법원이나 중재기구가 판결이나 재

결을 하지 아니한 채 권을 말한다. 이러한 채 권은 불확정상태이므로 그가 분배받아야 하는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 이런 채 권이 법에 따라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와 기타 채 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파산법 제119조는 이러한 채 권에 대하여는 관리자가 그에 해당하는 분배액을 인출하여 보관하였다가 법적 판결이나 재결이 나온 후에 확정된 액수에 따라 분배한다고 규정하였다. 채 권자가 완전 승소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전액을 분배하고 일부 승소하는 경우에는 승소한 부분만 분배하고 나머지는 파산재산으로 하여 기타 채 권자에게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채 권자가 완전 패소하는 경우 인출한 전액을 파산재산으로 하여 기타 채 권자에게 분배한다. 파산절차 종지 후 만2년이 되도록 분배하지 못하는 경우 인출액을 인민법원이 기타 파산채 권자에게 추가 분배한다.

7. 파산자가 분배에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20조** 파산자가 분배에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지 재정을 청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관리자의 파산절차 종지 재정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파산절차 종지여부를 재정하여야 한다. 종지를 재정하는 경우에는 공시해야 한다.

#### ◆ 법조문 해석

파산법 제120조 제1항은, 파산자가 분배에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지 재정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파산법 제120조 제3항은, 인민법원은 관리자의 파산절차 종지 재정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파산절차 종지여부를 재정하여야 한다. 종지를 재정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파산청산절차에서 파산절차를 중지하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파산분배를 펼하는 것으로 파산절차를 중지하고 둘째는 분배에 제공할 파산재산이 없는 원인으로 파산절차를 중지하는 것이다.

관리자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비용을 지불하고 공의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중지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와 경제거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파산한 사실을 알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채무자도 파산 관련 법률효과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는 동시에 파산절차 중지를 재정해야 한다.

#### 8. 파산재산 분배가 완료된 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20조** 관리자는 최종분배를 펼한 후 인민법원에 파산재산 분배 보고서들을 제출하고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중지 재정을 청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관리자의 파산절차 중지 재정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파산절차 중지여부를 재정하여야 한다. 중지를 재정하는 경우에는 공시해야 한다.

##### ◆ 법조문 해석

파산법 제120조 제2항은, 관리자는 최종분배를 펼한 후 인민법원에 파산재산 분배보고서들을 제출하고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중지 재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인민법원은 관리자의 파산절차 중지 재정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파산절차 중지여부를 재정하여야 한다. 중지를 재정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행한 파산절차 중지재정의 효력은 아래에 몇 가지 사항으로 볼 수 있다.

1. 파산자에 대한 효력. 파산절차 중지 후 관리자는 등록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절차 중지 후 분배받지 못한 채권자의 채권은 더 이상 변제하지 아니한다.

단, 파산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채무자는 파산절차 중지 후 채권자가 파산청산절차에 따라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계속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3. 관리자에 대한 효력. 관리자는 등록말소수속을 필한 의일부터 직무집행을 중지한다. 단, 소송이나 중재 미결상황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 9. 파산자의 등록말소수속은 어떻게 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21조** 관리자는 파산절차 중지일로부터 10일 내에 인민법원의 파산절차 중지재정을 지참하고 파산자의 원 등록기관에서 등록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 ◆ 법조문 해석

파산법 제121조는, 관리자는 파산절차 중지일로부터 10일 내에 인민법원의 파산절차 중지재정을 지참하고 파산자의 원 등록기관에서 등록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등록말소행위는 파산재산이 파산비용 지불에 부족하거나 파산자가 분배에 제공할 재산이 없거나 파산재산 분배를 필한 상황에 한한다. 전체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자들 대신하여 채무들 완전 변제하는 경우에는 필히 채무자의 법인자격을 중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

거나 채무자들 대신하여 채무들 완전 변제하는 경우는 채무자의 법  
인자격을 보류하고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 10. 관리자는 어느 시점에서 직무집행을 중지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22조** 관리자는 등록 말소수속을 필한 의일부터 직무집행을 중  
지한다. 단, 소송 또는 중재 미결상황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 ◆ 법조문 해석

파산법 제122조는, 관리자는 등록 말소수속을 필한 의일부터 직  
무집행을 중지한다. 단, 소송 또는 중재 미결상황이 있는 경우는 예  
외라고 규정하였다.

파산기업을 말소한 후 법원은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관리자 취소  
를 선고하고 관리자에게 인감이 있는 경우 회수해야 한다. 파산절차  
종지 후 관리자는 파산재산의 정리, 처분, 분배와 관련한 모든 자료  
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파산기업의 장부, 문서 등 자료는 파산  
기업의 상급 주관부서에 이송하여 보관하게 하고 상급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파산기업 설립자나 주주가 보관한다. 파산절차 종지 후  
추가 회수할 수 있는 파산재산 회수나 추가분배 등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자를 보류하거나 일부관리인원을 보류할 수  
있다.

11. 파산절차 종지 후 어떤 상황에서 채권자가 추가 분배를 청구  
할 수 있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23조** 이 법 제42조 제4항 또는 제120조 규정에 따라 파산절  
차를 종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파산재산 분배방안에 따라 추가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추가 회수할 재산을 발견한 상황

(2) 파산자가 분배에 제공해야 할 재산을 발견한 상황.

전항이 규정한 상황이 있으나 재산이 양적으로 분배에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분배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국고에 상납한다.

#### ◆ 법조문 해석

제123조는, 이 법 제42조 제4항 또는 제120조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를 종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파산재산 분배방안에 따라 추가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추가 회수할 재산을 발견한 상황

(2) 파산자가 분배에 제공하여야 할 재산을 발견한 상황.

전항이 규정한 상황이 있으나 재산이 양적으로 분배에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분배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국고에 상납한다고 규정하였다.

파산재산 분배가 완료된 후 관리자는 즉시 법원에 파산재산 분배보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파산절차 종지 재결을 청구해야 한다. 파산절차 종지 후 2년 내에 파산재산 범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채권자에게 분배해야 하는 재산이 발견된 경우 분배해야 한다. 기업파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분배를 해야 하는 상황은 주로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1. 최종분배방안 공시 후 또는 파산절차 종지 후 새로 회수한 파산재산이 있는 경우,

2. 최종분배방안 공시 후 또는 파산절차 종지 후 파산자에게 이 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가 규정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음을 발견하고 법에 따라 재산을 회수한 경우,

3. 최종분배방안 공시 후 또는 파산절차 종지 후 이의가 있는 채권 또는 소송, 중재 미결채권이 법적 재판에 의하여 원래 인출하였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은 상황,

4. 추가 분배하여야 할 기타 재산을 발견한 경우.

추가 분배는 파산절차 종지 후의 분배로서 관리자는 이미 의무종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분배는 인민법원이 실시해야 한다.

추가 분배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재정하여 공시한 분배방안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분배해야 한다.

상기 분배재산이 있지만 수량이 적어 분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분배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재산이 파산절차 종지 2년 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법정 추가 분배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분배하지 않는다.

**12. 파산절차 종지 후 파산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 채무자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24조** 파산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채무자는 파산절차 종지 후 파산청산절차에 따라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법에 따라 계속 변제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법조문 해석

파산법 제124조는, 파산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채무자는 파산절차 종지 후 파산청산절차에 따라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법에 따라 계속 변제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보증인의 보증대상이 파산자이고 기타 연대 채무자의 채권자 역시 파산자이므로 그들은 두말할 것 없이 파산자가 변제하지 못한

채무(즉 채권자가 파산청산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자기가 부담해야 할 책임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 제11장 법률책임

### 1. 파산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의 법률책임?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25조**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이 충직성 의무, 근면성 의무를 위반하여 기업의 파산을 초래하였다면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전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파산절차 종지일로부터 3년 내에 어떤 기업에서도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을 담임하지 못한다.

#### ◆ 법조문 해석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은 기업 운영관리자로서 기업에 충성하고 근면하게 일할 의무를 부담한다. 환언하면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은 의무를 충실하고 근면하게 이행하며 자기 책임을 다하고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직무이행과정에 직무를 유기하거나 기업의 이익을 손상하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 된다.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이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은, 첫째로, 기업의 직무집행에서 발생한 책임, 둘째로, 법률, 행정법규 또는 기업정관을 위반한 책임, 즉 행위자의 행위가 조성한, 정상적인 운영활동에서 리스크로 발생한 책임과는 구별되는, 그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 셋째로, 기업의 파산을 초래한 책임 등이 있다.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민사책임은 구체상황에 근거하고 법에 따라 확정한다. 이들에면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기업의 재산을 점유한 경우

법에 따라 재산반환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업의 채권을 포기한 경우 법에 따라 손실배상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총직, 근면 의무를 위반하여 기업의 파산을 초래한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은 파산절차 종지일로부터 3년 내에 어떤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직도 담임하지 못한다.

## 2. 채무자가 공정 변제를 방해한 경우의 법률책임?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28조** 채무자가 이 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규정 위반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 경우 채무자의 법정대표자와 기타 직접책임자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 법조문 해석

악의적인 채무도피 또는 고의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파산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는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기 1년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무상양도했거나, 명확하게 불합리한 저가로 거래했거나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를 제공했거나 기한 만료 전에 채무를 변제했거나 채권을 포기한 행위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권한이 있으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수리 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파산상황이 존재하는 데도 개별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권한이 있으며, 채무도피를 위하여 재산을 은닉, 이전하거나 채무를 허구하거나 부실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였다.

상기 행위는 명확한 위법행위에 속하므로 이런 행위를 행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당해 배상책임은 채무자의 법정대표자와 직접책임자가 부담한다.

## 3. 관리자의 법률책임?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30조** 관리자가 이 법 규정에 따라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고 업무집행에 충직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법조문 해석

관리자는 인민법원의 지정을 받고 전문 파산사무를 책임지게 되므로 채권과 채무를 공평하게 정리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파산법 제27조는, 관리자는 근면하게 직책을 다하고 직무에 충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인민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자는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고, 직무에 충직하며, 모든 업무들 진지하고 착실하게 수행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들 받아야 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인민법원의 인가들 받고 채권자회의나 채권자 위원회가 의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회의나 채권자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의식적으로 채권자회의의 감독을 받고 보고의무를 이행하며 직무들 충직하게 집행해야 한다.

관리자가 근면하게 직책을 다하지 않고 직무에 충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며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관리자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제12장 부 칙

1. 파산법 공포 전에 체불한 종업원의 노임과 기타 비용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32조** 이 법 시행 후 파산자가 이 법 공포일 전에 체불한 종업원의 노임과 종업원의 의료·상이 보조금, 위자료, 체불한, 종업원 개인계좌에 불입하여야 하는 기본 양로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및 법률, 행정법규가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상금은 이 법 제113조 규정에 따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부분은 이 법 제109조가 규정한 특정재산에서 당해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한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한다.

#### ◆ 법조문 해석

파산법의 이 규정은 파산기업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함으로써 그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조치이다. 파산법 규정에 따르면, 파산자가 체불한 종업원의 노임과 종업원의 의료·상이 보조금, 위자료, 체불한 종업원 개인계좌에 불입하여야 하는 기본 양로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및 법률, 행정법규가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상금은 파산자가 무담보 재산으로 우선 변제한다. 파산법 공포 후에 체불한 문제는 규정이 없는 데 이것은 관련 노동 및 사회보장 제도건설을 개선하고 법을 엄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 2. 금융기구의 파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34조**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구가 이 법 제2조가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가 인민법원에 당해 금융기구의 정리절차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가 중대한 경영위험이 발생한 금융기구에 대하여 법에 따라 인수관리, 위탁관리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당해 금융기구들 피고로 또는 집행대상으로 한 민사 소송절차 또는 집행절차 중지들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구가 파산하는 경우 국무원이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 법조문 해석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구는 일반 기업법인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상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의 안정 등 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관련 법률은 일부 특수한 규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업은행법 규정에 따르면, 상업은행이 이미 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예금자의 이익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 경우 국무원은 은행업 감독관리기구가 당해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상업은행이 만기채무들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국무원은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의 동의를 얻고 인민법원이 그 파산을 선고한다. 상업은행의 파산을 선고한 경우 인민법원이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 등 관련 부서의 관련자로 청산팀을 구성하고 청산한다. 상업은행 파산청산 시에는 청산비용, 체불한 종업원의 노임과 근로보험료를 지불한 후 우선 개인 저축예금자의 원리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증권법 규정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위법운영으로 또는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하여 증권시장 질서를 엄중하게 해치고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국무원 증권 감독관리기구가 당해 증권회사의 영업중지 정리를 명하고 기타기구에 위임하여 박관하게 하거나 인수 또는 취소 등의 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사회공공이익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지불능력이 이미 위기에 도달하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당해 보험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인수자가 인수한 보험회사의 재정상황이 이미 채무들 변제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동의를 얻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당해보험회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파산법은 상업은행 등 금융기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

용기구가 만지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자산이 채무를 완전 변제하기에 부족하거나 변제능력이 확실히 결여한 경우 국무원 금융 감독 관리기구가 인민법원에 당해기업의 정리절차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국무원 금융 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중대한 경영리스크가 발생한 금융기구에 대하여 인수, 박관 등의 조치들 취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당해금융기구들 폐교로 하거나 폐 집행인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집행절차 취소들 신청할 수 있다. 셋째, 국무원은 이 법과 기타 관련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금융기구 파산관련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 3. 기업법인 이외 조직의 파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 파산법의 관련 규정

**제135조** 기타 법률이 기업법인 이외 조직의 청산을 규정하였고 그것이 파산청산에 속하는 경우 이 법이 규정한 절차들 참조하여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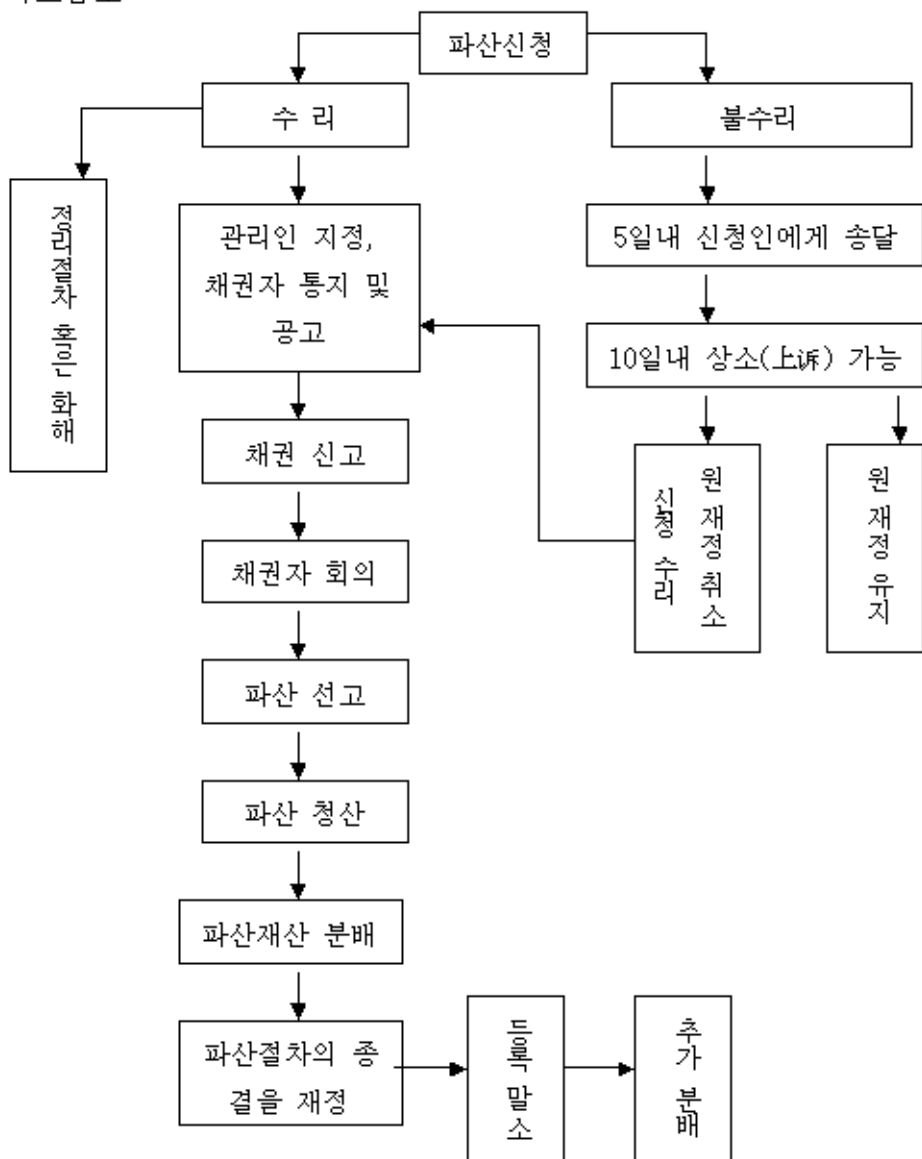
#### ◆ 법조문 해석

기타 법률이 규정한 기업법인 이외 조직에는 합명기업, 개인 독자기업, 민영학교,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공중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런 조직도 각종원인에 따른 청산문제가 존재한다. 그 청산이 파산청산인 경우에는 기업파산법이 규정한 절차들 참작하여 준용하여야 한다. 예하면 민영교육촉진법은, 민영학교 종지 시에는 법에 따라 재무를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민영학교가 자체로 종지하는 경우에는 민영학교가 청산하고 심사인가기관이 법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심사인가기관이 청산하며 자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종지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청산한다. 민영학교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종지하며 인민법원이 청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법이 규정한 절차들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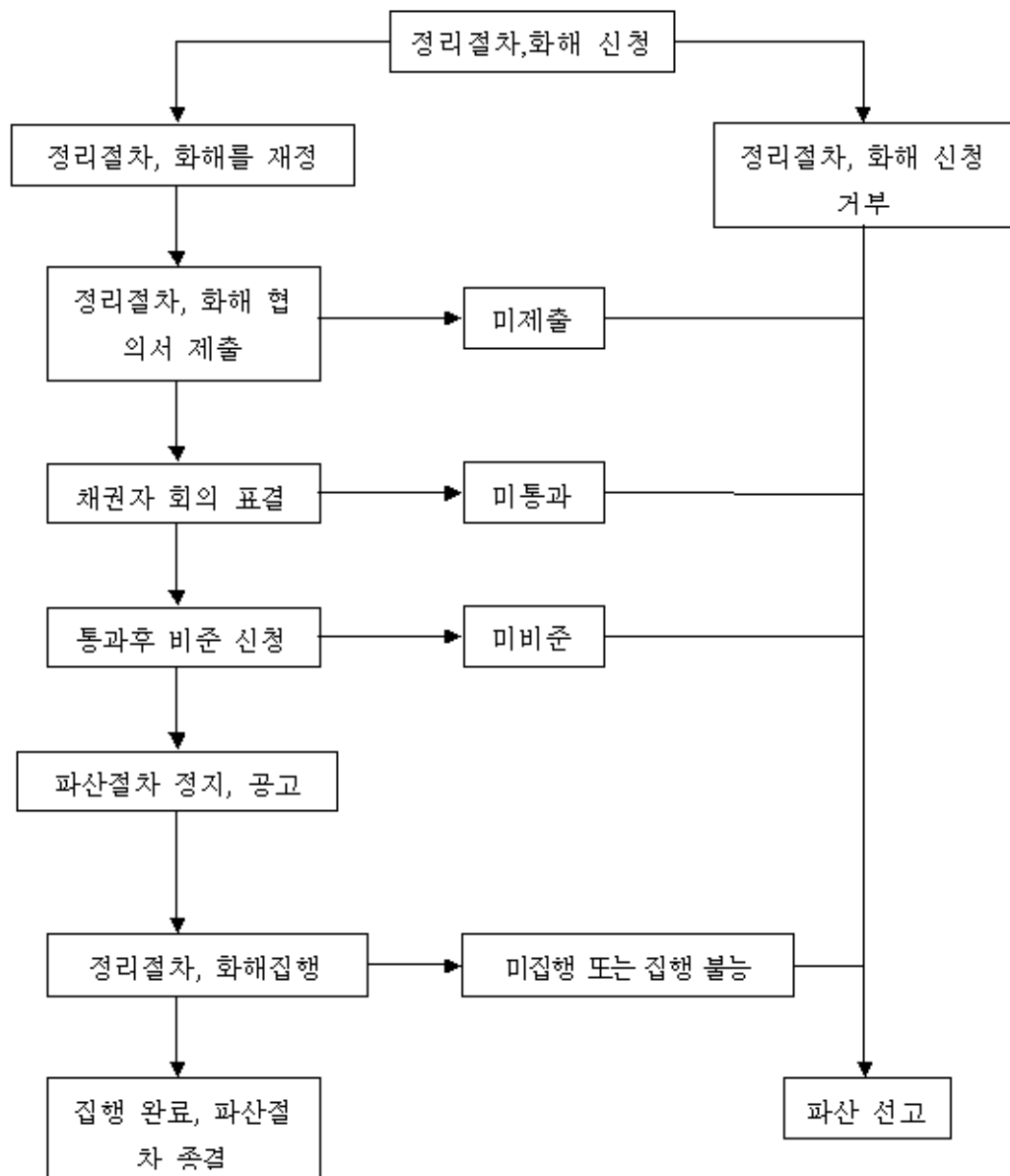


## 붙임: 파산 및 정리절차 흐름도

### (1)파산절차흐름도



(2) 정리절차/화해 흐름도



## II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 해설

1.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과 《기업파산법》의 관계는 어떠한가?

◆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이하 청산방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의법 설립한 중외합자 경영기업, 중외합작 경영기업, 외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의 청산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기업이 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 시에는 파산청산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 법조문 해석

기업의 자산으로 채무들 변제하고 청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업이 법에 의해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는 기업파산법을 적용하는데, 주로 아래의 2가지 상황이 있다.

(1) 기업이 청산 과정에서 그 자산으로 채무들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청산위원회는 인민법원에 기업의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기업파산법에 따라 채무들 청산해야 한다.

(2) 기업이 만기 채무들 변제하지 못하고 또한 그 자산으로 전부의 채무들 변제하기에 어렵거나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업파산법에 따라 채무들 청산해야 한다.

2. 보통청산과 특별청산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

**제3조** 기업이 자체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방법의 보통청산 관련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기업이 자체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할 수 없거나 보통청산규정에 따라

청산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동사회나 공동관리위원회 등 의결기구(이하 기업의결기구라 약칭 함), 투자자 혹은 채권자는 기업 심사비준기관에 특별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 심사비준기관이 특별청산을 비준하였을 경우에는 본 방법의 특별청산 관련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기업이 법에 따라 파산 해산령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 특별청산 관련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 ◆ 법조문 해석

##### 1. 보통청산

자산으로 채무들 변제할 수 있고 아울러 기업의결기구가 자체로 청산을 조직할 수 있는 기업에 적용한다.

##### 2. 특별청산

(1) 기업이 자체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할 수 없거나 또는 보통청산의 규정에 따라 청산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기업의결기구, 투자자 혹은 채권자는 기업 심사비준기관에 특별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2) 기업이 법에 의해 폐쇄 명을 받고 해산되어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 청산절차를 적용한다.

##### 3. 보통청산의 개시일자 및 청산기한이라 함은 무엇인가?

#### ◆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

**제5조** 기업청산 개시일은 기업경영기한 만료일, 혹은 기업 심사비준기관의 기업해산 비준일, 혹은 인민법원의 기업 계약종료 판결일, 혹은 중재기구의 기업 계약종료 재결일이다.

**제6조** 기업청산기한은 청산개시일로부터 기업 심사비준기관에 청산보고서를 회부한 날까지이며 최고 180일을 넘지 못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 청산기한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청산위원회가 청산기한만료 15일전에 기업 심사비준기관에 청산기한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연장기한은 최장 90일이다.

◆ 법조문 해석

1. 기업의 청산 개시일자

- (1) 기업 경영기한 만료일
- (2) 기업 심사비준기관이 기업의 해산을 비준한 날
- (3) 인민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구의 중재재결에 의해 기업 계약 또는 정관이 종료된 날

2. 기업 청산기한

- (1) 청산 개시일로부터 기업 심사비준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일까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2) 특수한 상황에서 연장이 필요할 경우 그 연장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기업이 청산기간에 신규 경영업무들 전개할 수 있는가?

◆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

**제7조** 기업은 청산기간에 신규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다.

◆ 법조문 해석

기업 청산기간에 청산위원회는 청산과 관련한 기업의 미완료 업무를 처분하게 되는데 이때 신규 경영활동을 허용한다면 새로운 거래 상대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

5. 보통청산의 청산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

**제8조** 기업이 청산하는 경우 기업의결기구는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개시일로부터 15일 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제9조** 청산위원회는 최소 3명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해당기업의 의결기구가 구성원 중에서 선정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담당하게 한다.

청산위원회는 주임 1명을 두며 의결기구에서 위임한다. 청산위원회는 의결기구의 동의를 얻고 업무담당을 초빙하여 청산과 관련한 구체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법조문 해석

기업의결기구는 청산 개시일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3명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의결기구는 그 구성원 가운데서 청산위원회의 구성원을 위임하거나 또는 해당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6. 청산위원회 구성원을 경질할 수 있는가?

◆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

**제10조** 청산기간에 다음 사항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위원회 구성원을 경질하여야 한다.

1. 청산위원회 구성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채권자의 채무상환 청구가 있고 또는 그 이유가 정당한 경우
3. 청산위원회 구성원이 사망했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 법조문 해석

청산위원회의 구성원은 반드시 공정하고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불법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야 각방 주주, 채무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청산위원회는 청산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산위원회 구성원이 아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 (1) 청산위원회 구성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 (2) 채권자의 채무상환 청구가 있고 또한 그 이유가 정당한 경우
- (3) 청산위원회 구성원이 사망했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7. 청산위원회는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

**제11조** 청산위원회는 청산기간에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기업 재산의 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청산 안 제정
2. 미확인 채권자를 위한 공고, 확인된 채권자에 대한 서면통지
3. 청산과 관련한 기업현안 업무처리
4. 재산평가 및 계산의거 제출
5. 체납세금청산
6. 채권·채무 정리
7. 기업채무 상환 후 잉여재산 처분
8. 기업대표로 민사소송활동 참가

◆ 법조문 해석

청산위원회의 직권이란 바로 청산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청산위원회의 직권은 주로 아래와 같다.

- (1) 기업의 자산 정리와 기업의 채무사항 처리
- (2) 기업의 채권, 채무를 조사 확인하고 처리
- (3) 기업의 미완료 업무를 청산
- (4) 채무 상환 및 잉여자산을 분배
- (5) 기업을 대표하여 민사소송에 참여.

8. 청산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통지할 하는가?

◆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

**제17조** 청산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10일 내에 확인된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여 채권을 청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성일로부터 60일 내에 최소 2회 전국일간지 1종과 당지 성급 혹은 시급 신문의 1종에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차 공고문은 청산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0일 내에 게재해야 한다.

청산공고문에는 기업명칭·주소, 청산원인, 청산개시일, 청산위원회 연락주소, 구성원 명단 및 연락인 등을 명시해야 한다.

◆ 법조문 해석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은 기업이 청산을 시작할 때 채권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기업의 상황을 알도록 규정하였다.

청산위원회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1종의 전국 범위에서 발행하는 신문과 1종의 당지 성급 또는 시급 신문에 청산 공고문을 게재하고 공고문에 기업의 명칭과 주소, 청산원인, 청산개시일, 청산위원회의 연락주소, 구성원 명단 및 연락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9. 채권자가 청산위원회의 채권 확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

**제21조** 채권자가 청산위원회의 채권 사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재사정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재사정결과에 대하여 그래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사정 서면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기업소재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와 기업이 중재에 회부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여야 한다. 소송 혹은 중재기간에 청산위원회는 분쟁대상 재산을 배분해서는 안 된다.



◆ 법조문 해석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하는 한편 채권 관련 증거자료들 제출해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그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심사해야 하며, 심사들 통해 채권자의 채권이 청산기업의 채권인가를 확정한다.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을 승인하지 않는 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승인하지 않는 통지서를 발송한다. 채권자가 청산위원회의 채권 심사확정에 대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재확인을 거쳤으나 그 결과에 여전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확인 서면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기업 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10. 어떤 비용을 청산재산에서 우선 지불하여야 하는가?

◆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

**제23조** 하기 청산비용은 청산재산에서 우선 지불하여야 한다.

1. 기업 청산재산의 관리·매각·배분에 소요되는 비용
2. 공고·소송·중재비용
3. 청산과정에 지불해야 하는 기타 비용

◆ 법조문 해석

1. 청산재산의 관리, 매각 또는 배분 비용은 아래와 같다.

(1) 관리비용이란 기업의 재산 정리, 보관 등 행위로 발생한 비용을 가리킨다.

(2) 매각비용이란 기업의 재산 매각, 경매 등 행위로 발생한 비용을 가리킨다.

(3) 배분비용이란 기업의 재산분배에 지출한, 예를 들면 공고비용, 통지비용, 공략비용 등 비용을 가리킨다.

2. 공고, 소송, 중재비용, 예들 들면 기업이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공고비용, 기업이 청산기간에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발생한 소송 비용, 중재비용 등을 가리킨다.

3. 청산과정에서 지출해야 하는 기타 비용. 앞부분의 비용 외에 청산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기타 비용을 가리킨다.

11. 청산비용을 우선적으로 지불한 후 나머지 청산재산을 어떤 순으로 변제하는가?

◆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

**제25조** 청산재산은 청산비용을 우선 지불한 후 다음의 순서에 따라 변제한다.

1. 종업원의 노임, 사회보험료
2. 국가세금
3. 기타 채무.

◆ 법조문 해석

청산절차를 진행할 때 청산재산에서 청산비용을 우선적으로 지불한 후에는 먼저 종업원의 임금, 사회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 다음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며, 마지막에 기타 채무를 상환한다. 청산과정에 기업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청산위원회는 인민법원에 기업의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12. 청산기업의 어떤 행위가 무효인가?

◆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

**제28조** 청산개시 전 180일 내에 발생한 기업의 하기 행위는 무효이다.

1. 기업재산의 무상양도
2. 비정상적 덤평가격에 의한 기업재산매도

3.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 제공

4. 채무의 기한만료 전 상환

5. 본 기업 채권의 포기

청산개시일로부터 청산결속 일까지 중외투자자는 기업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 법조문 해석

청산기업이 청산방법 제28조에서 규정 한 무효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는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하게 손상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법률은 상기 행위를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무효행위로 인정한다. 이런 행위는 주로 아래와 같다.

(1) 기업재산의 무상양도

(2) 비정상적 멸평가격에 의한 기업재산매도

(3)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 제공

(4) 채무의 기한만료 전 상환

(5) 본 기업 채권의 포기.

13. 청산재산의 가치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

**제29조** 청산재산의 평가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기업 계약·정관에 규정이 있는 것은 기업 계약·정관에 따른다.

2. 기업 계약·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중외투자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업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3. 기업 계약·정관에 규정이 없고 중외투자자가 협의하여 합의할 수 없을 경우 청산위원회는 국가의 관련 규정 및 자산평가기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확정하고 기업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4. 법원이 기업의 계약종료들 판결했거나 중재기구가 기업의 계약종료들 재결하고 청산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판결 혹은 재결의 규정에 따른다.

◆ 법조문 해석

기업의 청산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 (1) 기업 계약, 정관의 규정
- (2) 중의 투자자의 협상에 따라 결정
- (3) 청산위원회가 국가의 관련 규정을 따르거나 자산평가기구의 의견에 따라 확정
- (4) 법원이 기업의 계약종료들 판결했거나 중재기구가 기업의 계약종료들 재결하고 청산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한 경우 그 판결 혹은 재결규정에 따른다.

14. 청산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가?

◆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

**제31조** 청산위원회는 청산 안에 규정한 작업을 끝낸 후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청산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산 원인 · 기한 · 과정
2. 채권 · 채무 처리결과
3. 청산재산 처분결과.

◆ 법조문 해석

청산보고서는 청산작업의 총결로서 여기에는 청산원인, 기한, 과정, 채권과 채무의 처리결과, 청산재산의 처분결과 등이 포함된다. 청산보고서는 기업의결기구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기업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한다.

15. 청산보고서들 제출한 후 기업은 어떤 후속 작업을 마쳐야 하는가?

◆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

**제33조** 청산위원회는 기업 심사비준기관에 청산보고서들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세무기관과 세관에 가서 각기 등록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전항의 수속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청산보고서, 세무기관과 세관에서 발급한 등록말소증명서류들 기업등록기관에 보고하여 기업등록말소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함과 아울러 전국일간지 1종, 당지 성급 혹은 시급 신문 1종에 기업해산 공고문을 게재해야 한다.

◆ 법조문 해석

청산이 끝난 후 청산보고서들 원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하고 동시에 재정, 국세, 지세, 외환관리, 해관, 공상관리 등 부서에 제출하여 말소수속을 풀해야 한다.

16. 특별청산의 개시일은 어느때부터 기산되는가?

◆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

**제35조** 기업 심사비준기관이 특별청산을 비준한 날 또는 기업이 법에 의해 파산 명령을 받은 날이 특별청산 개시일이다.

◆ 법조문 해석

특별청산절차는 기업이 심사비준기관이 특별청산을 비준한 날 또는 기업이 법에 의하여 파산명령을 받은 날이다.

17. 특별청산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

**제36조** 기업이 특별청산에 들어갈 경우에는 기업 심사 비준기관 또는 그가 위임한 부문이 중외투자자, 관련 기관의 대표, 관련 전문가들 조직하여 청산위원회들 구성한다.

**제37조** 청산위원회는 주임 1명을 두며 기업 심사 비준기관 또는 그가 위임한 부문에서 지정한다. 특별청산 기간에는 청산위원회 주임이 기업 법정대표의 직권을 행사하고 청산위원회가 의결기구 직권을 행사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 관련 업무들 처리하고 그 활동을 기업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한다.

◆ 법조문 해석

특별청산위원회의 구성은 보통청산과 다르다. 특별청산위원회는 기업 심사 비준기관 또는 그가 위임한 부문이 중국 투자자, 외국 투자자 및 관련 기관의 대표, 해당 전문가들 조직하여 구성한다.

18. 채권자회의는 어떻게 소집하는가?

◆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

**제39조** 모든 채권자는 모두 채권자회의 구성원으로 되며 채권자회의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재산담보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권한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 채권자회의 대표는 기업 심사 비준기관 또는 그가 위임한 부문이 표결권을 가진 채권자중에서 지정한다.

**제40조** 채권자회의는 청산위원회가 소집한다. 청산위원회는 채권자회의 소집 15일전에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자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석시켜야 한다.

◆ 법조문 해석

채권자회의의 구성원은 전체 채권자로 구성하며, 구성원마다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재산담보를 설정한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는 상황 외에는 표결권을 직접 가지지 아니한다. 채권자회의의 주석은 채권자가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심사 비준기관 또는 그가 위임한 부문이 지정한다. 물론 채권자회의의 주석은 표결권을 가지는 채권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채권자회의의 소집은 청산위원회가 책임지며, 매번의 회의는 소집하는 15일 전에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통지할 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자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은 구두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19. 채권자회의의 직권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

**제41조** 채권자회의는 하기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자가 제공한 채권 관련 증명자료, 채권액수 및 담보상황을 심사한다.
2. 채무 변제상황을 파악하고 청산위원회에 청산 안 및 채무 변제 상황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을 제출한다.

### ◆ 법조문 해석

채권자회의는 2가지 직권을 행사한다. 첫째, 채권자에게 제공한 채권 관련 증명자료, 채권의 액수, 담보상황을 심사하고 채권의 합법적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기업의 채무변제상황을 파악하고 청산위원회에 청산 안과 채무변제 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 20. 청산 안과 청산보고서는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가?

### ◆ 청산방법의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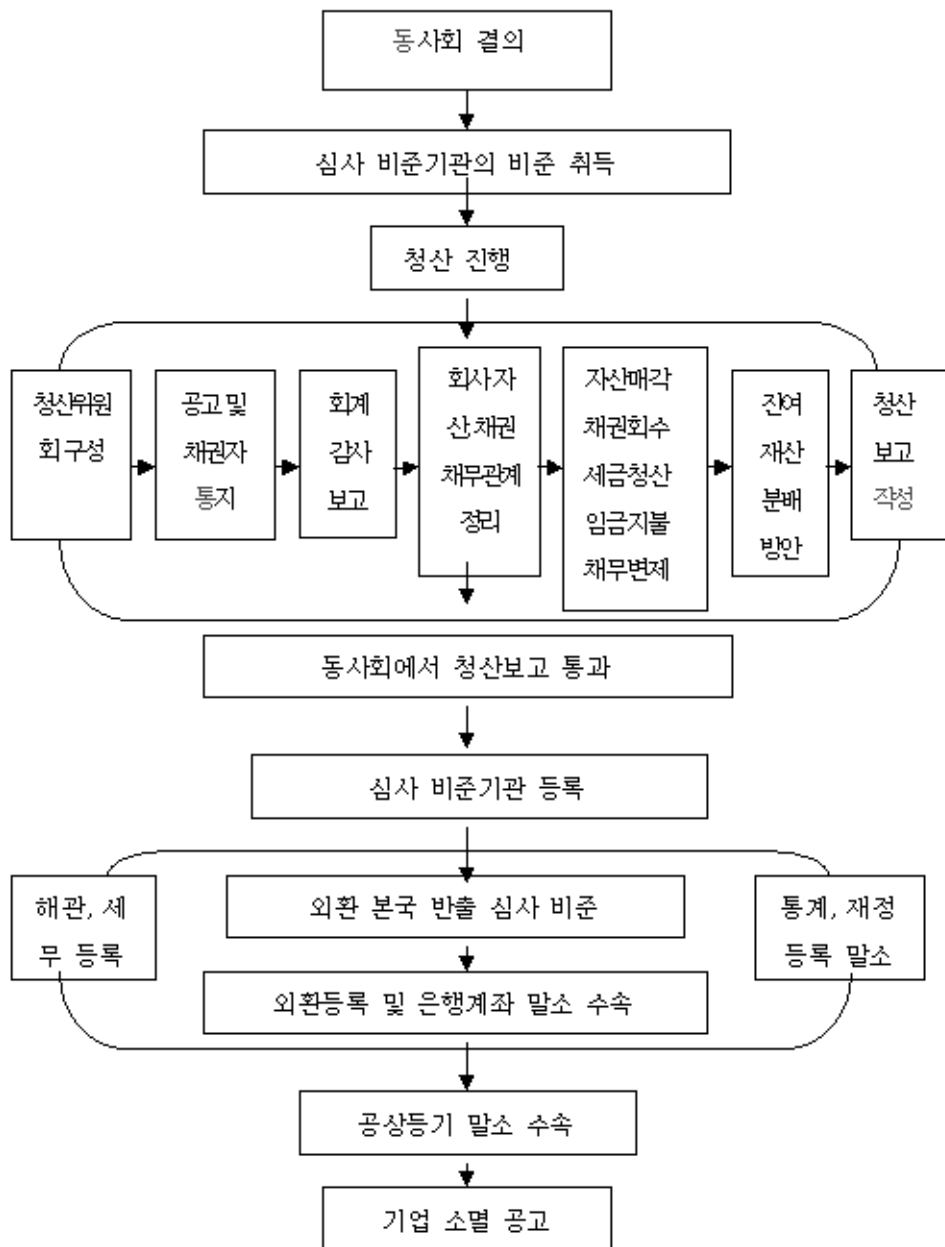
**제42조** 청산위원회가 제정한 청산 안과 작성한 청산보고서는 기업 심사비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법조문 해석

청산위원회가 제정한 청산 안과 청산보고서는 법률 효력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심사 비준기관, 즉 상무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기업청산은 기업의 내부행위일 뿐만 아니라 조세, 종업원의 복리대우 등 여러 가지 면과 관련되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붙임:외상인투자기업의 일반청산 흐름도



### Ⅲ 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 실무

## 1. 머리말

기업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정식으로 성립되며, 영업허가증을 말소 또는 회수 취소된 날로부터 중지되고 그 주체자격을 상실한다. 기업을 중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해산하고 청산해야 한다. 청산은 기업의 법률관계를 종결짓고 기업법인자격을 소멸하고 국가, 기업의 종업원, 채권자 및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수호하는 법정 절차이다.

## 2. 기업의 청산 전제조건

법에 의한 해산은 기업청산의 전제조건이다. 기업이 청산절차를 밟아야 법에 따라 해산할 수 있으며 그 재산, 채권과 채무들 전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청산개시일이 바로 기업이 법에 따라 해산되는 날이다.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업은 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

- (1) 회사정관에 규정한 영업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2) 기업 권리기구가 앞당겨 해산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외국투자기업이 앞당겨 해산할 경우에는 기업 심사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 (3) 중재기관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기업 계약, 정관이 중지되었을 경우
- (4) 기업이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의법 폐쇄 명령을 받았을 경우
- (5) 법원이 기업파산을 선고받았을 경우.

실제 업무에서 해산을 조성할 수 있는 아래의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 A. 기업의 계약, 정관에 약정한 해산사유 출현. 투자자가 해산사유 인정에 쟁의가 없을 경우 이런 해산은 상기 상황중의 (1)에 해당되고, 쟁의가 있지만 기업 권리기구가 의결하여 해산을 결정할 경우 상기 상황중의 (2)에 해당되며, 쟁의가 있는 동시에

기업 권리기구가 해산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상기 상황중의 (3)에 해당된다.

- B. 외국투자기업의 일부 투자자가 출자약정을 어기어 기업에서 스스로 퇴출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기업 심사 비준기관이 수약자측 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계약, 정관 종지들 비준하였다면 상기 상황중의 (2)에 해당되며 기업 권리기구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심사 비준기관이 투자자의 수약 및 위약을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상기 상황중의 (3)에 해당된다.
- C. 외국투자기업 일부 투자자의 주체 자격이 소멸되고 기타 투자자가 기업을 계속 경영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비준기관에 계약, 정관의 종지들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상기 상황중의 (2)에 해당되며 기업 권리기구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업이 합병 또는 분립으로 해산할 경우 통상적으로 청산절차를 밟지 않는다.

### 3. 기업의 청산방식

청산 구체 조직과 업무처리는 법에 따라 설립된 청산기구가 책임진다. 청산기구는 구체 조건에 따라 기업권리기구, 기업 심사 비준기관 또는 주관기관, 인민법원이 조직하는 동시에 그 조직자 앞에 책임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청산방식은 청산기구의 조직자에 따라 구분된다.

어떤 방식으로 청산하는 가는 기업의 해산원인에 따라 결정되고 기업의 재산, 채무상황 및 자체의 청산조직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청산은 통상적으로 아래의 3가지 방식을 취한다.

#### (1) 보통청산

청산 전제조건의 (1), (2), (3)호에 따라 해산할 경우 기업이 자체로 청산기구를 구성하여 청산할 수만 있다면 보통청산 방식에 따른다. 기업 권리기구는 청산기구를 자체로 조직하며 청산기구의 구성원과 주임은 기업 권리기구가 초빙하거나 임명한다. 청산기구는 기업 권리기구 앞에 책임진다.

#### (2) 특별청산

외국투자기업의 보통청산에 엄중한 장벽(기업이 자체로 청산위원회들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 포함)이 존재할 경우 기업 권리기구, 투자자 또는 채권자는 기업의 심사 비준기관에 특별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청산방식을 취할 경우 기업의 심사 비준기관 또는 그가 위임한 관련 부서가 중외 투자자, 관련 기관 대표 및 관련 전문인원을 동원하여 특별청산위원회들 구성하고 위원회 주임을 지정한다. 청산위원회는 기업의 심사 비준기관에 업무들 보고하며 제정한 청산방안과 작성한 청산보고는 기업 심사 비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이 법적 해산명령을 받았을 경우 그 주관기관은 주주, 관련 기관의 대표 및 관련 전문인원을 동원하여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절차를 밟는다. 이런 상황에서의 청산은 특별청산 방식에 속한다.

#### (3) 파산청산

기업이 기한부 채무들 변제하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법원은 주주, 관련 기관 및 관련 전문인원으로 청산팀을 구성하여 파산청산을 진행한다. 보통청산 또는 특별청산 과정에 기업의 재산으로 채무들 변제하기에 어려울 경우 즉시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한다. 법원의 파산선고를 재정받은 후 청산팀은 청산사무들 법원에 넘겨서 파산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 4. 청산기구

청산기구는 기업의 청산사무를 구체적으로 조직, 처리하는 업무기구로서 외국투자기업의 보통청산과 특별청산에서는 청산위원회라 칭하고 기타 상황에서는 청산팀이라고 칭한다.

청산기구는 주임 1명, 구성원 최소 3명으로 구성한다. 특별청산과 파산청산에서 청산기구의 “관련 기관”과 “관련 전문임원”은 통상적으로 국유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세무, 세관, 노동 및 사회보장, 재정, 금융 등 정부부서와 법률, 재무, 자산평가 등 면의 전문가들 말하는데 수요에 따라 그들을 초청하여 청산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 청산기구는 법률, 재무, 자산평가 사무소에 위탁하거나 업무직원을 초빙하여 구체 청산업무를 맡길 수 있다.

보통청산의 청산기구는 기업 해산일로부터 15일 내에 설립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설립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법정절차를 밟고 기타 청산방식에 들어갈 수 있다. 특별청산과 파산청산에서 청산기구의 조직자가 대표를 파견하여 청산기구에 참여하게 할 경우에는 파견대표에 대한 합리적 기간을 규정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대표를 파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산기구에 참여하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산기구의 구성원이 사망, 행위능력 상실, 불법행위가 있거나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경질해야 한다.

청산기구는 청산기간에 하기 직권을 행사한다.

- (1) 기지 채권자에게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미지 채권자에게는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한다.
- (2) 기업의 재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들 작성하며 청산방안을 제정하고 확인된 청산방안을 집행한다.
- (3) 청산 관련 기업의 미결 업무들 처리한다.
- (4) 재산평가 가액과 재산의거들 제출한다.
- (5) 체납세금과 의법 납부해야 할 비용을 정리 납부하고 관련 기관에서 과세(비용결계)증명수속을 한다.
- (6) 해임한 기업종업원의 임금, 노동보험비용을 납부한다.

- (7) 기업의 채권을 회수하고 기업 채무들 변제한다.
- (8) 채무변제후의 기업의 잔여자산을 처리한다.
- (9) 청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청산기구 조직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는다.
- (10) 기업말소 수속을 한다.
- (11) 기업을 대표하여 민사소송활동에 참여한다.

외국투자기업의 특별청산위원회는 기업 권리기구의 직권을 행사한다. 청산위원회는 기업 권리기구회의와 채권자회의를 소집하고 청산 관련 구체사항을 토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 주임은 기업 법정대표자의 직권을 행사한다.

#### 5. 청산중의 통지와 공고

통지와 공고는 기업청산의 법정절차로서 간소화하거나 생략하지 못한다. 통지와 공고대상은 주로 기업의 채권자, 여기에는 기업종업원, 금융기구 등을 포함한다. 그 목적은 상술한 대상에게 기업이 청산절차에 들어간 법률상태를 고지함으로써 법에 따라 그 합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도록 고지하는 것이다.

외국투자기업은 청산 개시일로부터 7일 내에 기업명칭, 주소, 청산원인 및 청산개시일 등을 서면으로 기업 심사 비준기관, 기업주관기관, 세관, 외환관리기관, 기업등록기관, 세무기관 및 기업 계좌개설은행 등 관련 단위에 통지해야 하며 기업에 국유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국유자산관리부서에도 통지해야 한다.

청산기구는 성립일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기지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도록 통지하는 동시에 성립일로부터 60일 내에 최소 3차의 공고들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최소 2차는 일종 전국에 배포되는 신문, 1종은 당지 성 또는 시급 간행물에 게재해야 한다. 제1차 공고는 청산기구 성립일로부터 10일 내에 게재해야 한다. 청산 공고에는 기업명칭, 주소, 청산원인, 청산개시일자, 채권 신고기간, 청산기구 통신주소, 구성원명부 및 연락처 등을 명기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제1차 공고일로부터 90일 내에 청산기구에 그 채권을 신고하는 동시에 채권액수, 담보상황 및 관련 증명자료들 제출해야 한다. 규정한 기간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하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기지 채권자의 채권은 청산재산에 넣어야 한다.

(2) 미지 채권자의 채권은 기업의 잔여재산을 배분하기 전에 변제들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잔여재산을 배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산기구는 채권자의 신고채권을 등록하고 채권을 심사 확정된 후 확정결과들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채권자가 확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기구에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확인 결과에 그래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서면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업 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채권자와 기업간에 중재에 회부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해야 한다. 소송 또는 중재기간에 청산기구는 쟁의재산을 배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통상적 상황에서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중재기관의 재결결과가 정식 하달, 집행된 후에야 기업의 잔여재산을 배분할 수 있다. 재산을 앞당겨 배분해야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 쟁의 채권의 변제에 충족한 재산이 있거나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 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의 인가를 얻은 후에야 실시할 수 있다.

## 6. 청산재산의 가치평가 및 처리

청산 시 가치들 평가해야하는 기업의 재산에는 통상적으로 고정자산(가옥, 건축물, 기계설비 등), 유동자금(원자재, 보조재료, 연료, 부품, 반제품, 미완성품, 완제품 등), 무형자산(노하우, 특허권, 상표권, 판권 등) 및 기타 자산을 포함한다. 자산 가치들 평가하는 목적은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청산방식(이들배면 보통청산 또는 특별청산에서 파산청산으로의 전환여부 판단)을 결정



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정리 납부하고 채무를 변제하며 투자자가 공평 합리적으로 잔여재산을 배분받도록 하기 위한 데 있다. 자산평가는 진실성, 공정성, 과학성 및 전문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평가 방법은 통상적으로 아래의 5가지가 있다.

- (1) 원상 원가법. 당해 자산의 원상복귀 원가에서 누적 감가상각을 공제한 후 평가.
- (2) 수익 현재가법. 당해 자산의 예상 수익 현재가치에 따라 평가.
- (3) 현행 시가법. 동종 또는 유사 자산의 시장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평가.
- (4) 청산 가격법. 청산시 당해 자산의 경매 가치에 따라 평가.
- (5) 액면표시가격에 따라 평가.

외국투자기업의 청산 재산의 가치 평가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1) 기업의 계약, 정관에 약정하였을 경우 기업의 계약,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2) 기업의 계약, 정관에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중외 투자자가 협상으로 결정하고 기업 심사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중외 투자자가 협상하여 일치한 의견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청산위원회는 관련 규정과 국가 법정기관에 등록 등기한, 자산평가 허가증을 소지한 자산평가기관의 의견에 따라 확정하고 기업 심사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 (3) 법원이 판결 또는 중재재결에서 재산 가치평가 방법을 규정하였을 경우 판결 또는 재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업의 계약, 정관이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고 계약, 정관에 규정한 가치 평가방법도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기 때문에 외국투자기업의 재산 가치평가의 실제 결정권이 심사 비준기관 또는 사법, 중재기관의 제어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청산과정에서 기업 또는 투자자의 부당 재산평가 행위를 방지하고 국가 또는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에 국유자산이 있을 경우 자산평가보고는 국유자산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재산을 매각할 경우 기업 투자자는 우선 매입권을 가진다. 투자자가 경매할 경우 값을 높이 부른 측에서 매입하며 기업 투자자가 매입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하기 방식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경매시장에서 공개 경매

(2) 합의 판매(입찰방식 포함)

(3) 채권자에게 직접 양도하여 가치를 쳐서 채무를 변제.

저당물을 매각할 경우 당해 저당물 채권자는 우선 매입권을 가진다.

기업의 잔존 종업원 장려 및 복지기금, 중국측 종업원의 주택보조기금 및 노조경비, 그리고 상기 기금이나 경비로 구입한 제반 재산, 시설은 기업의 청산재산으로 하지 않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7. 채권, 채무 및 그 변제

채권, 채무 변제는 기업 청산의 중요한 업무로서 구체적으로 관련 각방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데서 구현된다. 기업 경영기간에 관련 법인, 공민간의 계약 또는 비계약 경제거래로 형성한 대량의 채권, 채무, 그중 다년간의 미결 장부는 청산을 통하여 정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와 청산기업에 손실을 조성할 수 있다.

청산기업의 채권자와 채권액수는 채권자가 신고하고 청산기구가 등록, 대조 확인 및 재확인한 후 어떤 것은 소송이나 중재들 통해서 최종적으로 채권자의 법률지위와 채권액수를 확정할 수 있으며 이들 변제 의거로 하게 된다.

청산기업에 대한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의 채무는 기업의 채권이다. 이런 채권을 정리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청산기구의 중요한 업무로서 필요시에는 소송으로 해결함으로써 전액 회수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기업 권리기구의 확인을 받은 후 청산손익에 넣어야 한다.

변제는 청산에서의 관건 단계이기 때문에 변제 절차에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 소송 또는 중재사건이 미결 상황인 경우 쟁의 재산을

변제하거나 배분하지 못한다. 청산비용은 청산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기업의 청산재산 관리, 매각 및 배분에 필요한 비용
- (2) 공고, 통지, 소송, 중재비용
- (3) 청산과정에서 지급해야 하는 기타 비용, 이들에면 업무직원의 보수, 가치평가, 회계감사 비용 등이다. 청산재산에서 청산비용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후에는 법률이 규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한다.
  - ① 종업원의 임금, 노동보험비용
  - ② 국가 세금 및 법에 따라 국가에 상납해야 하는 기타 비용
  - ③ 담보채권
  - ④ 기타 채무.

상기 순서에서 앞의 순서들 전부 변제한 후에야 다음의 변제순서에 들어갈 수 있다. 규정은 종업원의 이익을 앞에 두고 국가 이익을 앞에 두는 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였다.

청산개시일 전에 이루어진, 재산담보가 있는 채권 변제는 하나의 특수한 문제이다. 담보법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담보를 설정한 채권자는 당해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담보물 매각 소득은 우선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며 변제순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담보물 매각 금액이 채권액수보다 적을 경우 그 미 변제 부분은 변제 순서에 따라 변제한다. 담보물 매각 금액이 채권액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부분은 보통 변제에 사용한다. 청산기업의 재산이 채무 변제에 부족할 경우 청산기구는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하며 파산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변제 순서에 따라 변제한 후 청산재산으로 동일 순서의 채무들 변제하기 어렵다면 각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 비율로 변제한다.

국가와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청산기업이 재산을 이전, 은닉하는 것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채무들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법규는 청산 개시 전 180일 내의 기업의 하기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였다.

- (1) 기업재산의 무상 양도행위
- (2) 비정상 가격으로의 기업재산 매각행위
- (3)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행위
- (4) 만기 전 채무의 기간만료 전 변제행위
- (5) 본 기업의 채권 포기행위.

그리고 청산 개시일로부터 청산 종결까지 투자자는 기업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배분하지 못하며 그 전부 채무를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은 투자자의 실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거나 법률, 법규 또는 기업의 계약,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 8. 청산중의 노동관리

### (1) 기업 종업원 정리

기업 종업원은 대체적으로 2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기업과 근로관계를 수립한, 근로계약 범주에 속하는 종업원들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이 고용한 노무범주에 속하는 인원들로서 이런 인원들은 이 기간에 원 단위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이미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기업이 청산할 때 부당한 상황에 따라 종업원의 종지수속을 해야 한다.

#### ① 근로관계 해지

기업이 해산할 때 종업원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면 기업과 종업원간의 근로관계는 스스로 종지된다. 종업원과의 근로관계가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은 종업원과의 근로관계를 해지해야 한다.

근로관계 종지 또는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업은 해산일로부터 종업원에게 근로관계를 종지하거나 해지하는 서면 통지들을 발송한다. 종업원은 통지들 받은 30일 후 기업과 근로관계를 해지하며 기업은 종업원에게 근로관계 종지 또는 해지 증명을 작성해 준다.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기업은 1차적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기준은 그 종업원의 본 기업 근무 연한에 따라 매 1년 만기에 1개월의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경제보상금은 본 기업의 그 전년도 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발급한다. 종업원이 계약 해지 전 12개월 내의 평균임금이 본 기업의 그 전년도 월 평균 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본인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발급한다.

기업이 종업원에게 직업을 배치(배치했으나 종업원이 복종하지 않는 상황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종업원이 주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지하였을 경우 기업은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노동관계 해지

기업이 청산할 때 노무 중개단위 또는 종업원 본인과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기업의 경제보상금 지급여부는 노동계약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에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정년퇴직 조건에 부합된 종업원의 퇴직수속

기업이 청산할 때 종업원이 정년퇴직 조건에 부합될 경우 기업은 소재지 구(현) 노동행정부서에서 그 정년퇴직 수속을 봐야 한다.

## (2) 미지급 종업원 비용 지급

기업은 청산일로부터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제반 비용을 정리, 지급해야 한다. 지급 비용은 원 지출루트를 통하여 지출하며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의 청산재산에서 지급한다.

## ① 지급

기업은 청산일로부터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1차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기준은 기업 내부 분배제도 또는 근로계약에서 확정한 종업원의 월급 기준에 따라 발급한다. 구

체 기준이 없을 경우 종업원의 실제 출근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종업원이 출근하였을 경우 기업은 당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준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며 종업원이 실업하였을 경우에는 당지 기본생활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기업은 규정한 기간 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이외에 임금보수의 25%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② 체납 사회보험비 납부

재직 종업원의 사회보험비를 납부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다. 기업은 근로관계들 수립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업원을 위하여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이 청산할 때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완 납부함으로써 종업원의 사회보장 적용에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험비에서 종업원 개인의 납부부분은 기업이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다.

## (3) 사회보험 이전

기업은 청산일로부터, 늦어서 등록말소 후 30일 내에 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사회보험” 등록 말소수속을 하고 종업원의 취향에 따라 사회보험 이전수속을 해야 한다.

## (4) 근로관계 이전

기업은 종업원과 근로관계들 종지하거나 해지한 날로부터 7일 내에 호적 소재지에 몰아가서 재취직하는 종업원 명부를 당해 지구(현)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근로관계들 종지하거나 해지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기업은 사회보험 관련 자료 및 종업원의 서류들 그 호적 소재지 지구(현)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이전해야 한다.

직업을 자체로 해결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종지 또는 해지 일로부터 20일 내에 사회보험 관련 자료와 종업원의 서류들 종업원이 지정한 지방에 이전하여야 한다.

기업이 중국 종업원의 복지비와 주택보조금 등을 절약한 비용은 종업원을 접수하는 목표회사에 이전하고 목표회사가 없을 경우에는 상급 주관부서에 상납한다.

#### 9. 청산종결과 기업등록 말소

기업이 청산비용을 지급한 동시에 그 전부 채무(종업원의 임금과 사회보험비, 국가 세금 및 의법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기타 비용 포함)을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은 투자자의 실제 출자비율에 배분한다. 법률, 법규 또는 기업 계약,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잔여재산은 현금 및 기타 가분할 재산, 권익을 제외하고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 어려운 상황은 배분 재산의 구체 형태와 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자간의 만장일치 전제하에서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

청산기구는 청산 방안이 확정된 업무들 완성한 후 청산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청산보고에는 (1) 청산원인, 기간 및 과정 (2) 채권, 채무 처리결과 (3) 청산재산의 처분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청산보고는 부동한 청산방식에 따라 청산기구 조직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심사 비준기관, 주관 재정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배분받은 잔여재산을 국외로 송금할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동시에 의법 해산, 청산 서류, 청산기구 조직자가 확인한 청산보고, 세무기관 및 세관이 제시한 과세증명, 외환등록증, 외환 계좌개설통지서 보관부분, 청산 결속일의 은행 예금장부 대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은 심사 확인 후 <자본계정 환매도 심사인가서>(환구입에 사용)와 <자본계정 환송금 비준서>를 제시한다. 기업은 상기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외환 지정은행에서 환구입 및 환송금 수속을 하고 외환계좌를 폐쇄하는 동시에 외환관리기관에 외환은행의 계좌 말소 증명을 제출하여 외환계좌 및 외환등록증 말소수속을 한다.

청산이 끝난 후 청산기구는 청산 결속일로부터 30일 내에 기업 등록기관에 기업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등록 말소를 신청시 아래에 규정한 서류들 제출해야 한다.

- (1) 청산기구 책임자가 서명한 등록 말소신청서
- (2) 기업의 의법 해산, 청산 관련 서류
- (3) 청산기구 조직자의 확인을 받은 청산보고
- (4) 세무기관이 제시한 과세증명, 세관이 제시한 <기업 세관수속 완료 통지서>
- (5)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청산기업은 기업의 인장을 기업 등록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기업 등록기관의 심사인가들 거쳐 기업등록이 말소되면 기업이 종지되고 기업법인 자격이 소멸된다.

기업이 법에 따라 등록말소 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기업 등록기관은 그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원 기업의 법정대표는 기타 기업의 법정대표를 담임하지 못한다.



## IV 첨부

### 1.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2006년 8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주식 령 제54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을 2006년 8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채택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식 胡錦濤

2006년 8월 27일

####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파산 절차를 규범화하고 채권, 채무 청산을 공평하게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기업법인이 만기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자산이 채무를 완전 변제하기에 부족하거나 변제능력이 명확히 결여한 경우 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한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이나 변제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확연한 기업법인은 이 법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할 수 있다.

**제3조** 파산사안은 채무자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4조** 파산사안 심리절차와 관련하여 이 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민사소송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이 법에 따라 개시한 파산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밖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도 유효하다.

법률효력을 발생한, 파산사안 관련 외국법원의 판결, 재정이 중화

인민공화국 영역내의 재산과 관련되고 인민법원에 그에 대한 인정, 집행을 신청 또는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공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심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및 사회 공공이익을 손상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한, 인정하고 집행을 재정한다.

**제6조** 인민법원은 파산사안 심리 시에 법에 따라 기업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파산기업 운영 관리인의 법률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 제2장 신청과 접수

### 제1절 신청

**제7조** 이 법 제2조가 규정한 상황이 있는 채무자는 인민법원에 정리절차, 화해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정리절차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 법인이 이미 해산하였으나 청산하지 않았거나 청산을 펴하지 않았으며 자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법에 따라 청산책임을 부담한 자가 인민법원에 파산청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파산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산신청서에는 하기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1) 신청자와 피 신청자의 기본상황
- (2) 신청일자
- (3) 신청사실과 이유
- (4) 인민법원이 명기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이밖에 자산상황 설명서,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재무회계 관련 보고서, 종업원 안치 예정방안 및 노임지급상황과 사회보험료 납부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신청자는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신청취하  
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절 접 수**

**제10조** 인민법원은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입수한 날로부터 5일 내  
에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의 통지일 입수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의 만기일로부터 10일 내에 접수여부를 재  
결하여야 한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파산신청을 입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수리여부를 재결하여야 한다.

특수상황으로 앞 두 항이 규정한 접수기한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  
우 직상급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고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파산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재정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신청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정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채  
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재정 송달일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재산상황 설명서, 채무자명부, 채권자명부, 재무회계 관  
련보고서 및 종업원 노임 지급,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접수거부를 재정한 경우 재정한 날  
로부터 5일 내에 신청자에게 송달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재  
정에 불복하는 신청자는 재정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부터 파산선고 전까지의 심사기  
간에 채무자가 이 법 제2조가 규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신청기각을 재정할 수 있다. 재정에 불복하는 신청자는  
재정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13조** 인민법원은 파산신청 접수일 재정함과 동시에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인민법원은 파산신청 접수 재정일로부터 25일 내에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통지와 공시에는 하기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신청자와 피 신청자의 명칭 또는 성명
- (2) 인민법원 파산신청 접수일시
- (3) 채권 신고기한, 장소, 주의사항
- (4) 관리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그 사무장소
- (5) 관리인에게 채무변제 또는 재산이관 관련 채무자의 채무자 또는 재산소지자에 대한 요구
- (6) 제1차 채권자회의 소집 일시와 장소
- (7) 인민법원이 통지와 공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15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접수 재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날로부터 파산절차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채무자의 관련자는 하기 각호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1) 그가 점유하고 관리하는 재산, 인감과 장부, 문서 등 자료를 차실 없이 보관하고
- (2) 인민법원과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하며
- (3) 채권자회의에 방청하여 채권자의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하고
- (4) 인민법원의 인가 없이 주소지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 (5) 여타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전항이 관리인이라 함은 기업의 법정대표자를 말하며 인민법원이 정하는 경우 재무관리임원과 기타 경영관리임원을 망라할 수 있다.

**제16조** 인민법원이 청산신청을 접수한 후에 진행된 개별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무효이다.

**제17조** 인민법원이 청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채무자 또는 재산 소지자는 관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채무자 또는 재산 소지자가 고의로 전 항 규정을 위반하고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이관하여 채권자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그의 채무변제 또는 재산이관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인은 파산신청 전에 체결하고 채무자나 상대측 당사자가 모두 이행을 필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해지 또는 계속 이행을 결정하고 상대측 당사자에게 통지할 권한이 있다. 관리인이 파산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상대측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대측 당사자의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리인이 계약의 계속 이행을 결정한 경우 상대측 당사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단, 상대측 당사자는 관리인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리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재산 관련 보전조치를 해지하고 집행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이미 개시하였으나 종료하지 아니한 채무자 관련 민사소송 또는 중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당해 소송 또는 중재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인수한 후 계속한다.

**제21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 관련 민사소송은 파산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 제3장 관리인

**제22조** 관리인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채권자회의가, 관리인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기타 상황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경질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인 지정 및 관리인 보수 확정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

**제23조** 관리인은 이 법 규정에 따라 직무들 집행하고 인민법원 앞에 업무들 보고하며 채권자회의 및 채권자위원회의 감독을 접수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채권자회의에 방청하여 채권자회의에 업무 집행상황을 보고하고 질문에 대답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리인은 관련 부문과 기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청산팀이나 법에 따라 설립한 변호사 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파산청산 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가 담당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채무자 실정에 근거하여 사회 관련 중개기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당해기구 임직원 중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직업자격을 취득한 자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을 담당하지 못한다.

- (1) 고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2) 직업자격 증서들 몰수당한 일이 있는 자
- (3) 당해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 (4) 인민법원이 관리인 인선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있는 자.

관리인을 담당하는 개인은 직업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 관리인은 하기 각호의 직책을 이행한다.

- (1) 채무자의 재산, 인감과 장부, 문서 등 자료 인수
  - (2) 채무자 재산상황 조사, 재산상황 보고서 작성
  - (3) 채무자의 내부관리사무 결정
  - (4) 채무자의 일상지출과 필요한 기타 지출 결정
  - (5) 제1차 채무자회의 소집 전에 채무자 영업 계속여부 결정
  - (6) 채무자 재산의 관리와 처분
  - (7) 채무자 대표로서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법률절차 참가
  - (8) 채권자회의 소집제의
  - (9) 인민법원이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직책.
- 이 법이 관리인의 직책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관리인이 제1차 채권자회의 소집 전에 채무자의 영업 계속여부를 결정하거나 이 법 제69조가 규정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하는 때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관리인은 근면하게 직책을 다하고 직무에 충직하여야 한다.

**제28조** 관리인은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고 필요한 직원을 초빙할 수 있다.

관리인의 보수는 인민법원이 확정한다. 채권자회의가 관리인의 보수에 대하여 이의를 가지는 경우 인민법원에 제의할 권한이 있다.

**제29조**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퇴하지 못한다. 관리인의 사퇴는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장 채무자의 재산**

**제30조** 파산신청 접수 시에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전부, 그리고 파산신청 접수 후부터 파산절차 종료 전까지의 기간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이다.

**제31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기 전 1년 내에 채무자 재산관련 하기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 (1) 재산의 무상양도행위
- (2) 확실히 불합리한 가격으로 진행한 거래행위
- (3)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대한 재산담보 제공행위
- (4) 만기 전 채무 상환행위
- (5) 채권 포기행위.

**제32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기 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이 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상황이 있고 개별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개별채무 상환으로 하여 채무자가 수익을 본 경우는 예외이다.

**제33조** 채무자 재산관련 하기행위는 무효이다.

- (1) 채무 포탈을 위한 재산 은닉, 이전

(2) 채무 허구, 또는 허위채무 인정.

**제34조** 이 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가 규정한 행위로 하여 취득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인은 회수할 권한이 있다.

**제35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출자자가 출자의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인은 당해 출자자에게 출자기한에도 불구하고 출자불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관리인은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취득한 비 정상수입과 점유한 기업의 재산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7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인은 채무변제 또는 채권자가 접수하는 담보제공을 통하여 질물과 유치물을 회수할 수 있다.

전항이 규정한 채무변제 또는 담보대체 시 질물 또는 유치물의 가치가 담보목적 채권 액보다 적은 경우 당해 질물과 유치물의 당시 시장가치에 한한다.

**제38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가 점유한 재산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부분은 당해 재산의 유권자가 관리인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다. 단,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이다.

**제39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할 때 매출자가 표적물을 매입자인 채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채무자가 접수하지 못하고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자가 운송 도중에 있는 표적물을 회수할 수 있다. 단, 관리인이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매출자에게 표적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 파산신청 접수 전에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무는 관리인에게 채무상쇠를 주장할 수 있다. 단, 하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쇠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신청 접수 전에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타인의 채권인 경우.

(2) 채권자가, 채무자가 만기채무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 또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단, 채권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또는 파산신청 1년 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는 예외이다.

(3) 채무자의 채무자가, 채무자가 만기채무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 또는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채권을 취득한 경우. 단, 채무자의 채무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또는 파산신청 1년 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채권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이다.

### **제5장 파산비용과 공의채무**

**제41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에 발생한 하기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파산비용이다.

- (1) 파산사안의 소송비용
- (2) 채무자 재산의 관리, 현금화 및 분배비용
- (3) 관리인의 직무 집행비용과 보수 및 직원 초청비용.

**제42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에 발생한 하기 각호에 해당하는 채무는 공의채무이다.

- (1) 관리인이나 채무자가 양측이 모두 이행을 필하지 아니한 계약의 이행을 상대방에 청구하는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
- (2) 채무자의 재산이 관리인의 책임 이외의 원인으로 입은 손실의 채무
- (3) 채무자의 부당한 이윤으로 발생한 채무
- (4) 채무자의 계속영업을 위하여 지불한 노동보수와 사회보험료 및 이로 하여 발생한 기타 채무
- (5) 관리인 또는 관련자의 직무집행으로 타인의 손상을 초래하여 발생한 채무
- (6) 채무자의 재산이 타인의 손상을 초래하여 발생한 채무.

**제43조** 파산비용과 공의채무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수시로 변제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비용과 공의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파산비용을 우선 변제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비용 또는 공의채무들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비율에 따라 상환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지들 청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파산절차 종지청구들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파산절차 종지들 재정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제6장 채권 신고

**제44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을 향유하는 모든 채권자는 이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권리들 행사한다.

**제45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의 채권신고 기한을 확정하여야 한다. 채권신고 기한은 인민법원 파산신청 접수 공시일로부터 기산하고 최소 30일 이상, 최고 3개월 이내로 한다.

**제46조** 비 만기채권은 파산신청 접수와 동시에 만기로 간주한다.

금리 부가채권은 파산신청 접수와 동시에 금리계산을 중지한다.

**제47조** 조건부채권, 기한부채권, 소송-중재 미결채권은 채권자가 신고할 수 있다.

**제48조**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체불한 종업원의 노임, 의료·상이 보상비, 위자료와 종업원 개인 계좌에 불입할 기본 양로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및 법률, 행정법규가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상금은 신고할 필요 없이 관리인이 조사하여 명세서들 공시한다. 명세서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는 종업원은 관리인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인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들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 채권자의 채권신고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액수와 재산담보의 유무를 설명함과 동시에 관련증거들 제출하여야 한다. 연대채권 신고는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 연대채권은 대표자 1명이 채권자 전체를 대표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채권자 전체가 공동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제51조**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기타 연대채무자가 채무자들 대리하여 채무들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으로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기타 연대채무자가 채무자 대리하여 채무들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미래 구상권으로 관리인에게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단, 채권자가 관리인에게 채권전액을 신고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52조** 연대채무자 수 명에게 이 법이 규정한 절차들 준용하기로 재정된 경우 그 채권자는 채권 전액을 각각 당해 파산사안에서 채권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53조** 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이 법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실 배상청구권으로 채권을 신고한다.

**제54조** 채무자가 위탁계약의 위탁인이고 이 법 규정을 준용하기로 재정하였지만 당해 수탁인이 모르고 계속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수탁인은 이로 발생한 청구권으로 채권을 신고한다.

**제55조** 채무자가 어음발행인이고 이 법이 규정한 절차들 적용하기로 재정하였으며 당해 어음지불인이 계속 지불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지불인은 이로 하여 발생한 청구권으로 채권을 신고한다.

**제56조** 인민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들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파산재산 최종분배 전에 보충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 전에 이미 진행된 분배는 보충 분배하지 아니한다. 보충 신고한 채권확인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보충 신고자가 부담한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이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권리들 행사하지 못한다.

**제57조** 관리인은 신고 자료들 접수한 후 등록부에 등록하고 신고한 채권을 심사함과 아울러 채권그래프들 작성하여야 한다.

채권그래프와 채권신고 자료는 관리인이 보관하고 이해 관련자의 조회에 제공한다.

**제58조** 이 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채권그래프는 제1차 채권자회의에 회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권그래프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확인한다.

채권그래프에 기재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무자와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7장 채권자회의**

### **제1절 일반 규정**

**제59조**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채권자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채권자회의에 출석할 권리가 있고 표결권을 향유한다.

미확정 채권의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그의 표결권 행사를 위한 채권 액을 임시로 확정하는 외에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채권자로서 우선상환권을 보기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제61조 제1항 제7호, 제10호가 규정한 사항의 표결권을 향유하지 못한다.

채권자는 대리인을 위임하여 채권자회의에 출석하고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채권자회의에 출석하는 대리인은 인민법원 또는 채권자회의의 주석에게 채권자의 수권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채권자회의는 채무자의 종업원과 노조대표가 참가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 채권자회의는 주석 1명을 두며 인민법원이 표결권을 향유하는 채권자 중에서 지정한다.

채권자회의는 채권자회의의 주석이 집행한다.

**제61조** 채권자회의는 하기 각호의 직권을 행사한다.

- (1) 채권 검사확인
- (2) 인민법원에 관리인 경질 신청, 관리인의 비용과 보수 심사
- (3) 관리인에 대한 감독
- (4) 채권자위원회 구성원 선임 및 경질
- (5) 채무자 영업 계속 또는 중지 결정

- (6) 정리절차계획 통과
- (7) 화해합의서 통과
- (8) 채무자의 재산 관리방안 통과
- (9) 파산재산 현금화방안 통과
- (10) 파산재산 분배방안 통과
- (11) 인민법원이 채권자회의가 행사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직권.

채권자회의는 토의한 사항의 의결 관련 회의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2조** 제1차 채권자회의는 인민법원이 소집하고 채권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5일 내에 소집한다.

그 후의 채권자회의는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또는 관리인, 채권자회의, 채권총액의 1/4 이상을 소지한 채권자가 채권자회의 주석에게 제의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63조** 채권자회의 소집 시에는 15일 전에 관리인이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 채권자회의의 결의는 회의에 출석한, 표결권을 소지한 채권자 과반수로 통과하고 그가 대표한 채권 액이 무 재산담보 채권 총액의 1/2 이상을 점하여야 한다. 단, 이 법이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는 예외이다.

채권자가, 채권자회의 결의가 법률규정에 위배되고 그의 이익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권자회의가 의결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결의 취소를 재청하고 채권자회의의 의법 재의결을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회의의 결의는 전체 채권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65조** 이 법 제61조 제1항 제8호, 제9호가 나열한 사항은 채권자회의의 표결결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이 법 제61조 제1항 제10호가 나열한 사항은 채권자회의가 2회 표결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앞 두 항이 규정한 재정은 인민법원이 채권자회의에서 선포하거

나 채권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수 있다.

**제66조** 채권자가 이 법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인민법원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채권 액이 무 재산담보 채권총액의 1/2 이상을 점한 채권자가, 이 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인민법원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정 선포일 또는 통지 입수일로부터 15일 내에 당해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의기간에 재결의 집행은 중지하지 아니한다.

## 제2절 채권자위원회

**제67조** 채권자회의는 채권자위원회 결성을 결의할 수 있다. 채권자위원회는 채권자회의가 선임한 채권자대표와 채무자의 종업원대표 또는 노조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채권자위원회 구성원은 9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채권자위원회 구성원은 인민법원이 서면결정으로 인가하여야 한다.

**제68조** 채권자위원회는 하기 각호의 직권을 행사한다.

- (1) 채무자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한 감독
- (2) 파산재산 분배에 대한 감독
- (3) 채권자회의 소집에 대한 제의
- (4) 채권자회의가 위임한 기타 직권.

채권자위원회는 직권 행사시에 관리인과 채무자 관련인원에게 그 직권범위 내 사무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서류 제공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관리인과 채무자 관련인원이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위원회는 감독사항에 대한 인민법원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5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69조** 관리인의 하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즉시 채권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토지, 가옥 등 부동산 권의 양도행위
- (2) 황산 담사권, 채취권, 지적재산권 등 재산권 양도행위

- (3) 재고품 또는 영업 전반 양도행위
  - (4) 차입금 차입행위
  - (5) 재산담보 설정행위
  - (6) 채권과 유가증권 양도행위
  - (7) 채무자와 상대측이 모두 이행을 필하지 아니한 계약 이행행위
  - (8) 권리 포기행위
  - (9) 담보물 회수행위
  - (10) 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기타 재산 처분행위.
- 채권자위원회들 결성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인의 전항의 행위들 즉시 인민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장 정리절차

### 제1절 정리절차 신청과 정리절차 기간

**제70조** 채무자나 채권자는 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정리절차들 직접 인민법원에 신청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청산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부터 채무자의 파산을 선포하기 전까지 채무자 또는 출자액이 채무자 등록자본금의 1/10 이상을 점하는 출자인이 인민법원에 정리절차들 신청할 수 있다.

**제71조** 인민법원은 심사결과 정리절차신청이 이 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 정리절차들 재정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72조** 인민법원이 채무자 정리절차들 재정해서부터 정리절차 종료까지가 정리절차기간이다.

**제73조** 정리절차 기간에 채무자가 신청하고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으면 채무자가 관리인의 감독 하에 자체로 재산을 관리하고 영업사무들 진행할 수 있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사무들 인수 관리하는 관리인은 재산과 영업사무들 채무

자에게 이관하고 이 법이 규정한 관리인의 직책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제74조** 재산과 영업사무 관리책임을 부담한 관리인은 채무자의 경영관리직원을 초청하여 영업사무를 책임지게 할 수 있다.

**제75조**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특정재산 담보권 향유자는 잠시 담보권 행사를 중지한다. 단, 담보물의 손상 또는 가치의 현저한 절하가 가능하여 담보인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보인이 인민법원에 담보권 행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계속 영업을 위해 차입금이 차입할 경우 당해 차입금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제76조** 채무자가 타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당해 재산 권리자가 정리절차기간에 회수하려 하는 경우에는 원 약정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7조**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출자인은 투자수의 분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리절차기간에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은 그가 소지한, 채무자의 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단,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제78조** 정리절차 기간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 또는 이해 관련자가 청구하면 인민법원이 정리절차 절차중지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만회할 가망성이 적은 상황

(2) 채무자가 사기 또는 악의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한 기타 행위를 하는 상황

(3) 채무자의 행위로 하여 관리인의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상황.

## **제2절 정리절차계획의 작성과 인가**

**제79조** 채무자나 관리인은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정리절차를 재정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동시에 인민법원과 채권자회의에 정리절차



계획초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전항이 규정한 기간이 만료되고 채무자나 관리인이 정당한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3개월 연기를 재정할 수 있다.

채무자나 관리인이 규정기간에 정리절차계획초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리절차 절차중지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80조** 채무자가 자체로 재산과 영업사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작성한다.

관리인이 재산과 영업사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정리절차계획초안을 작성한다.

**제81조** 정리절차계획초안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망라하여야 한다.

- (1) 채무자의 경영방안
- (2) 채권 유형
- (3) 채권 조정방안
- (4) 채권 변제권방안
- (5) 정리절차계획 집행기한
- (6) 정리절차 계획집행 감독기한
- (7) 채무자 정리절차에 유익한 기타 방안.

**제82조** 하기 각호 채권의 채권자는 정리절차계획을 토의하는 채권자회의에 출석하고 하기 채권 분류에 따라 조를 나누어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표결한다.

- (1)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채권
- (2) 채무자 미지급 종업원 노임과 의료·상이 보조금, 위자료, 미지급 종업원 개인 계정에 불입할 기본 양로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및 법률, 행정법규가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상금
- (3) 채무자의 체불세액
- (4) 일반 채권.

인민법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 채권자 조(組)에 소액채권자 조(組)를 내워서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표결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 정리절차계획에는 채무자가 제출한, 이 법 제8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이외의 사회보험료 감면을 규정하지 못한다. 당해 비용 채권자는 정리절차계획초안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제84조** 인민법원은 정리절차계획초안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채권자회의를 소집하고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표결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동일 표결조의 채권자 과반수가 찬동하고 그들이 대표하는 채권 액이 당해 조 채권총액의 2/3 이상을 점하는 경우 당해 조에서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무자나 관리인은 채권자회의에서 정리절차계획초안을 설명하고 질문에 대답하여야 한다.

**제85조** 채무자의 출자인 대표는 정리절차계획초안 토의를 위한 채권자회의에 방청할 수 있다.

정리절차계획초안이 출자인의 권의조정 사항과 관련될 경우 출자인 팀을 내어서 당해 사항을 표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86조** 각 표결조가 모두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경우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정리절차계획초안 통과일로부터 10일 내에 인민법원에 정리절차계획초안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검사하여 이 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인가를 재정하고 정리절차절차를 중지함과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87조** 일부 표결조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나 관리인이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하지 못한 표결 조와 협상할 수 있다. 당해 표결 조는 협상 후 1회로 재 표결할 수 있다. 양측의 협상결과가 기타 표결조의 이익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리절차계획초안 표결조가 재 표결을 거부하거나 재 표결에도 불구하고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정리절차계획초안이 하기 각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정리절차계획초안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정리절차계획초안에 따라 이 법 제82조 제1항 제1호가 나열한

채권의 당해 특정재산이 전액 변제받을 수 있고 그 변제연체로 인한 손실을 공평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동시에 그 담보권이 실질적 손해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표결조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경우

(2) 정리절차계획초안에 따라 이 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나열한 채권이 전액 변제받을 수 있거나 또는 상응한 표결 조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경우

(3) 정리절차계획초안에 따라 일반 채권의 변제비율이 정리절차계획초안 비준 제출 시 파산청산 절차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비율보다 낮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표결 조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경우

(4) 정리절차계획초안의 출자인 권익조정이 공평, 공정하거나 또는 출자인조가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한 경우

(5) 정리절차계획초안이 동일 표결 조 구성원을 공평하게 대하였고 채권 변제순위 관련규정이 이 법 제113조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6) 채무자의 경영방안이 사업성을 구비한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결과 정리절차계획초안이 전항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인가를 재정하고 정리절차절차를 중지하는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88조** 정리절차계획초안을 통과하지 못하였고 또 이 법 제87조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미 통과한 정리절차계획초안이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정리절차 중지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제3절 정리절차계획의 집행**

**제89조** 정리절차계획은 채무자가 집행한다.

인민법원이 정리절차계획 인가를 재정한 후 재산과 영업사무 관리에 인수한 관리인은 재산과 영업사무 관리를 채무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90조** 인민법원 정리절차계획 인가 재정일로부터 정리절차계획

이 규정한 감독기간 내에는 관리인이 정리절차계획 집행을 감독한다.

감독기간 내에 채무자는 정리절차계획 집행상황과 채무자의 재무상황을 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 감독기간 만료 시에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감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관리인의 감독직책이 중지된다.

정리절차계획 이해관련자는 관리인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감독보고서를 조회할 권리가 있다.

관리인이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정리절차계획 집행 감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2조** 인민법원이 인가를 재정한 정리절차계획은 채무자와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모두 구속력을 가진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정리절차계획 집행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정리절차계획 집행을 필한 후 정리절차계획이 규정한 동일 유형 채권 변제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향유하는 권리는 정리절차계획으로 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93조** 채무자가 정리절차계획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리인 또는 이해관련자의 청구에 따라 정리절차계획 집행을 중지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정리절차계획 집행중지를 재정한 경우 정리절차계획에서 한 채권조정을 위한 채권자의 약속은 효력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정리절차계획 집행으로 받은 변제는 유효하며 채권에서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파산재산으로 한다.

전항이 규정한 채권자는 동 순위의 기타 채권자가 그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은 후에 계속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이 조 제1항이 규정한 상황은 정리절차계획 집행에 제공한 담보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94조** 정리절차계획에 따라 감면한 채무는 정리절차계획 집행을 완료한 후부터 채무자가 더는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9장 화 해**

**제95조** 채무자는 이 법 규정에 따라 직접 인민법원에 화해들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화해들 신청할 수도 있다.

화해들 신청하는 채무자는 화해 합의서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 인민법원의 심사결과 화해신청이 이 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해들 재정하고 공시하는 동시에 채권자들의 소집하고 화해초안을 토의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특정재사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권리자는 인민법원의 화해 재정일로부터 권리들 행사할 수 있다.

**제97조** 채권자들의 화해합의서 결의들 통과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한, 표결권자 과반수가 찬동하고 그들이 대표한 채권 액이 무재산담보 채권총액의 2/3 이상을 점하여야 한다.

**제98조** 채권자들의 화해합의서를 통과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가들 재정하고 화해절차들 중지함과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채무자에게 재산과 영업사무들 이관하고 인민법원에 직무 집행보고서들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 채권자들의 표결에서 화해합의서초안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권자회의에서 통과한 화해합의서초안이 인민법원의 인가들 받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화해절차 중지들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인민법원이 재정하여 인가한 화해합의는 채무자와 화해채권자 전체에게 모두 구속력을 가진다.

화해채권자라 함은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는 때 무 재산담보권 향유하는 채권자들 지칭한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화해채권자는 화해합의 집행기간에 권리들 행사하지 못하며 화해합의 집행 완료 후에

화해합의서가 규정한 변제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1조** 채무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 책임자에 대하여 화해채권자가 향유하는 권리는 화해합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02조** 채무자는 화해합의서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조** 채무자의 사기 또는 기타 불법행위로 인하여 성립한 화해합의는 인민법원이 무효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전항이 규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화해채권자가 변제받은 채권은 여타 채권자가 변제받은 동등한 범위까지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4조** 채무자가 화해합의를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화해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화해합의 집행종지령을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화해합의 집행종지령을 재정한 경우 화해채권자가 화해합의 시에 한 채권조정 약속은 효력을 상실한다. 화해채권자가 화해합의 집행과정에 향유한 채권변제는 유효하고 화해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전항이 규정한 채권자는 여타 채권자가 자기가 변제받은 비율과 동등한 비율까지 변제받은 후부터 계속 변제받을 수 있다.

이 조 제1항이 규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화해합의 집행에 제공한 담보는 계속 유효하다.

**제105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가 전체 채권자와 채무처리 관련합의를 달성한 경우 인가를 재정하고 파산절차 종지령을 선고할 것을 인민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06조** 화해합의에 따라 채무를 감면한 경우 채무자는 화해합의 집행을 필한 시점부터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10장 파산청산**

### **제1절 파산선고**

**제107조** 인민법원이 이 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

는 경우 재정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채무자와 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재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한 후 채무자는 파산자라 칭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산이라 칭하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시점에 채무자에 대하여 향유하는 채권은 파산채권이라 칭한다.

**제108조** 파산선고 전에 하기 각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절차 중지를 재정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1) 제3자가 채무자에게 충분한 담보들 제공하였거나 또는 채무자의 만기채무들 전액 청산한 상황

(2) 채무자가 만기채무들 전액 상환한 상황.

**제109조** 파산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권리자는 당해 특정재산에 대한 변제우선권을 향유한다.

**제110조** 이 법 제109조가 규정한 권리들 향유하는 채권자가 변제우선권을 행사하고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한다. 변제우선권을 포기한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한다.

## **제2절 현금화와 분배**

**제111조** 관리인은 적시에 파산재산 현금화방안을 작성하여 채권자회의의 토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채권자회의가 통과하였거나 또는 인민법원이 이 법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한 파산재산 현금화방안에 따라 적시에 파산재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여야 한다.

**제112조** 파산재산의 현금화를 위한 매각은 경매를 통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회의가 별도의 결의를 한 경우는 예외이다.

파산기업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들 현금화할 수 있다. 기업은 현금화 매각 시에 무형자산과 기타 재산을 단독으로 매각할 수 있다.

국가규정이 경매를 불허하거나 양도들 제한하는 재산은 국가가 규정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3조** 파산재산은 파산비용과 공의채무를 우선 변제한 후 하기 각호가 나열한 순위로 변제한다.

(1) 파산자가 체불한 종업원의 노임과 종업원 의료·상이 보조금, 위자료, 체불한, 종업원 개인계좌에 불입하여야 하는 기본 양로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및 법률, 행정법규가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상금

(2) 파산자가 체불한, 전호 규정 이외의 사회 보험료와 파산자가 체불한 세액

(3) 일반 파산채권.

파산재산이 동일 순위의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할 경우 동일 비율로 분배한다.

파산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의 임금은 당해 기업 종업원의 평균노임으로 계산한다.

**제114조** 파산재산의 분배는 동화분배 방식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회의가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115조** 관리인은 적시에 파산재산 분배방안을 작성하여 채권자회의의 토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파산재산 분배방안에는 하기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파산재산 분배에 참가하는 채권자 명칭이나 성명, 주소
- (2) 파산재산 분배에 참가하는 채권 액수
- (3) 분배에 제공할 수 있는 파산재산 액수
- (4) 파산재산 분배순위, 비율 및 액수
- (5) 파산재산 분배 실시방법.

관리인은 채권자회의가 파산재산 분배방안을 통과한 후 당해 방안을 인민법원의 재정에 회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6조** 인민법원이 파산재산 분배방안을 재정, 인가한 후 관리인이 집행한다.

관리인이 파산재산 분배방안에 따라 수차에 나누어 분배하는 경우 매차 분배시의 분배재산 액과 채권 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최종 분배 시 관리인의 공시에는 이 법 제117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지명하고 명시하여야 한다.

**제117조** 관리인은 발효 조건부 또는 해제 조건부 채권의 분배액을 인출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전항 규정에 따라 분배액을 인출하는 경우 최종분배 공시 일에 발효조건에 미달하였거나 해제조건에 도달하였다면 기타 채권자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최종분배 공시 일에 발효조건에 도달하였거나 해제조건에 미달하였다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8조**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분배액은 관리인이 인출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최종분배 공시 일로부터 만 2개월이 지나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배 수령권리 포기로 간주하고 관리인이나 인민법원이 인출한 분배액을 기타 채권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119조** 파산재산 분배 시에 소송이나 중재 미결채권은 관리인이 그 분배액을 인출하여야 한다. 파산절차 종지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인출한 분배액을 기타 채권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제3절 파산절차의 종지

**제120조** 파산자가 분배에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지 재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최종분배를 펼한 후 인민법원에 파산재산 분배보고서를 제출하고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지 재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관리인의 파산절차 종지 재정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파산절차 종지여부를 재정보정하여야 한다. 종지를 재정보정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한다.

**제121조** 관리인은 파산절차 종지일로부터 10일 내에 인민법원의 파산절차 종지재정을 지참하고 파산자의 원 등록기관에서 등록 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22조** 관리인은 등록 말소수속을 펼한 의일부부터 직무집행을 종지한다. 단, 소송 또는 중재 미결상황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123조** 이 법 제42조 제4항 또는 제120조 규정에 따라 파산절

채를 종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파산재산 분배방안에 따라 추가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추가 회수할 재산을 발견한 상황

(2) 파산자가 분배에 제공하여야 할 재산을 발견한 상황.

전항이 규정한 상황이 있으나 재산이 양적으로 분배에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분배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국고에 상납한다.

**제124조** 파산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채무자는 파산절차 종지 후 파산청산절차에 따라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법에 따라 계속 변제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1장 법률 책임

**제125조**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이 충직성 의무, 근면성 의무를 위반하여 기업의 파산을 초래하였다면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전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파산절차 종지일로부터 3년 내에 어떤 기업에서도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을 담임하지 못한다.

**제126조** 채권자회의에 방청할 의무를 진 채무자의 관련 인원이 인민법원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회의에 방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이 호출하고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채무자의 관련 인원이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진술, 대답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 대답을 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7조** 채무자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인민법원에 재산상황 설명서,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채무회계 관련보고서 및 종업원 노임 지급상황과 사회 보험료 납부상황 제출을 거부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재산상황 설명서,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채무회계 관련보고서 및 종업원 노임 지급상황과 사회 보험료 납부상황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그 직접책임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인에게 재산, 인감과 장부, 문서 등 자료 이관을 거부하거나 재산 관련 증거자료를 위조, 소멸하여 재산상태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그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8조** 채무자가 이 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규정 위반행위들 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 경우 채무자의 법정대표자와 기타 직접책임자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9조** 채무자의 관련자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주소지들 이탈한 경우 인민법원이 훈계, 구속하고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0조** 관리인이 이 법 규정에 따라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고 업무집행에 충직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1조** 이 법을 위반하여 범죄들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12장 부 칙

**제132조** 이 법 시행 후 파산자가 이 법 공포일 전에 체불한 종업원의 노임과 종업원의 의료·상이 보조금, 위자료, 체불한, 종업원 개인계좌에 불입하여야 하는 기본 양로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및 법률, 행정법규가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상금은 이 법 제113조 규정에 따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부분은 이 법 제109조가 규정한 특정재산에서 당해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한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133조** 이 법 시행 전에 국무원이 규정한 기한과 범위 내에서 국유기업의 파산을 실시한 특수사례는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4조**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구가 이 법 제2

조가 규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가 인민법원에 당해 금융기구의 정리절차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가 중대한 경영위험이 발생한 금융기구에 대하여 법에 따라 인수관리, 위탁관리 등 조치들 취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당해 금융기구들 피고로 또는 집행대상으로 한 민사 소송절차 또는 집행절차 중지들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구가 파산하는 경우 국무원이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5조** 기타 법률이 기업법인 이외 조직의 청산을 규정하였고 그것이 파산청산에 속하는 경우 이 법이 규정한 절차들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136조** 이 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시범)》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2.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

1996년 7월 9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

### 제1장 총 칙

**제1조** 외상투자기업 청산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채권자와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법에 따라 설립한 중외합작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이하 기업이라 약칭함)의 청산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기업이 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했을 경우에는 관련 파산청산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 기업이 자체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방법 보통청산 관련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기업이 자체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할 수 없거나 보통청산규정에 따라 청산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업의 이사회나 공동관리위원회 등 의결기구(이하 기업의결기구라 약칭함), 투자자 혹은 채권자는 기업 심사비준기관에 특별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심사비준기관이 특별청산을 비준하였을 경우에는 본 방법 특별청산 관련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기업이 법에 따라 파산령을 받고 해산되어 청산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 특별청산 관련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제4조** 기업의 청산은 반드시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미 인가된 기업 계약서·정관의 기초 위에서 공정·합리하게, 기업·투자자·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 제2장 보통청산

#### 제1절 청산기한

**제5조** 기업청산 개시일은 기업경영기한 만료일, 혹은 기업심사비

준기관인 기업해산비준일, 혹은 인민법원의 기업계약종지 판결일, 혹은 중재기구의 기업계약종지 재결일이다.

**제6조** 기업청산기한은 청산개시일로부터 기업심사비준기관에 청산보고서를 회부한 날까지이며 최고 180일을 넘지 못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 청산기한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청산위원회가 청산기한만료 15일전에 기업심사비준기관에 청산기한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연장기한은 최고 90일이다.

**제7조** 기업은 청산기간에 신규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다.

## 제2절 청산기구

**제8조** 기업이 청산하는 경우에는 기업의결기구가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개시일로부터 15일 내에 성립되어야 한다.

**제9조** 청산위원회는 최소 3명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해당기업의 의결기구가 구성원 중에서 선정하거나 관련 전문요원을 초빙하여 담당하게 한다.

청산위원회는 주임 1명을 두며 의결기구에서 임명한다. 청산위원회는 의결기구의 통의를 얻고 작업요원을 초빙하여 청산의 구체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청산기간에 다음 상황중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청산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1. 청산위원회 구성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채권자의 청구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청산위원회 구성원이 사망했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제11조** 청산위원회는 청산기간에 다음 직권을 행사한다.

1. 기업 재산의 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청산안 제정
2. 미확인 채권자를 위한 공고, 확인된 채권자에 대한 서면통지
3. 청산과 관련한 기업현안 업무처리
4. 재산평가 및 계산의거 제출

5. 채납세금청산
6. 채권·채무 정리
7. 기업채무 상환 후 잉여재산 처분
8. 기업대표로 민사소송활동 참가

**제12조** 청산위원회가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제출한 재산평가 및 계산근거와 청산안은 의결기구가 확인한 후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청산위원회의 성립후 기업의 관련 직원은 청산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기업의 회계통계표, 재무장부, 재산목록, 채권자채무자명부 및 청산관련 기타 자료들 청산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청산위원회는 법에 따라 청산의무를 이행하고 협상원칙에 의거 청산 관련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 구성원은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고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불법소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업재산을 침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청산기관에 기업심사비준기관과 기타 관련 주관기관은 기업 청산 관련회의에 출석하여 기업의 청산작업을 감독할 수 있다.

### 제3절 통지와 공고

**제16조** 기업은 청산개시일로부터 7일 내에 기업의 명칭·주소·청산원인·청산개시일자 등을 기업심사비준기관, 기업주관부문, 세관, 외환관리기관, 기업등록기관, 세무기관, 기업구좌개설은행 등 관련단위에 서면통지하여야 하며 기업에 국유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자산관리행정주관부문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청산위원회는 성립일로부터 10일 내에 확인된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여 채권청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성립일로부터 60일 내에 최소 2회 전국일간지 1종과 당지 省級 혹은 市級신문 1종에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차 공고문은 청산위원회 성립일로부터 10일 내에 게재하여야 한다.

청산공고문에는 기업명칭·주소·청산원인·청산개시일, 청산위원회 연

락주소, 구성원 명단 및 연락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채권자는 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통지를 접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1차 공고일로부터 90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채권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채권자는 규정된 기한내에 채권청구와 아울러 채권액수 및 채권 관련 증명자료를 회부하여야 한다.

채권청구기한내에 채권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확인된 채권자의 채권은 청산에 산입한다.
2. 미확인 채권자의 채권은 기업잉여재산의 배분결속 전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잉여재산 배분결속 후에는 채권포기로 간주한다.

#### **제4절 채권·채무와 변제**

**제20조** 청산위원회는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을 등록하고 사정·확인한 후 그 결과들 채권자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청산위원회의 사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재사정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재사정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사정 서면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기업소재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와 기업이 중재약정을 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여야 한다. 소송 혹은 중재기관에 청산위원회는 분쟁대상재산을 배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청산위원회는 청산기간에 발생한 재고손익, 매각, 상환불능채무와 회수불능채권, 청산기간의 수입과 손실 등에 대하여 의결기구에 서면설명과 증명을 제시하고 이들 청산손익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23조** 하기 청산비용은 청산재산에서 우선 지불하여야 한다.

1. 기업 청산재산의 관리·매각·배분에 소요되는 비용
2. 공고·소송·중재비용



### 3. 청산과정에 지불하여야 할 기타비용

**제24조** 청산 개시일전에 발생한 재산담보채권의 채권자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한을 가진다. 재산담보채권의 액수가 담보물 환가소득액을 초과할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본 방법 제25조에 규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다.

**제25조** 청산재산은 청산비용을 우선 지불한 후 다음 순서에 따라 변제한다.

1. 종업원의 노임, 근로보험비
2. 국가세금
3. 기타 채무

**제26조** 청산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기업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기업재산을 배분하지 못한다. 청산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기업재산은 투자자의 실제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단, 법률·행정법규 혹은 기업계약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7조** 청산과정에 기업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청산위원회는 인민법원에 기업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할 경우에는 파산청산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청산한다.

**제28조** 청산개시 전 180일 내에 발생한 기업의 하기 행위는 무효이다.

1. 기업재산의 무상양도
2. 비정상적 덤핑가격에 의한 기업재산매도
3.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 제공
4. 채무의 기한 만료전 상환
5. 본 기업 채권의 포기

청산개시일로부터 청산결속일까지 중외투자자는 기업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 제5절 청산재산의 평가와 처분

**제29조** 청산재산의 평가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기업 계약정관에 규정이 있는 것은 기업 계약정관에 따른다.
2. 기업 계약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중외투자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기업 계약정관에 규정이 없고 중외투자자가 협의하여 합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산위원회가 국가의 관련 규정 및 자산평가기구의 의견을 참조하여 확정하고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법원이 기업의 계약종지를 판결했거나 중재기구가 기업의 계약종지를 재결하고 청산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판결 혹은 재결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청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기업투자자에게 우선 구매권이 있으며 높은 가격을 신고하는 측이 구매한다.

## **제6절 청산의 종료**

**제31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안에 규정한 작업을 끝낸 후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청산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산의 원인·기한·과정
2. 채권·채무 처리결과
3. 청산재산 처분결과

**제32조** 청산보고서는 의결기구의 확인을 받은 다음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 청산위원회는 청산보고서를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세무기관과 세관에 각기 등록·말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전항의 수속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보고서, 세무기관과 세관에서 교부한 등록·말소증명서류를 기업등록기관에 보고하여 기업등록·말소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함과 아울러 전국일간지 1종, 당지 省級 혹은 市級신문 1종에 기업종지 공

교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从此页到142页有好几处字体很虚》

**제34조** 기업의 청산이 완료된 후 기업등록말소수속을 하기 전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회계증빙, 회계장부, 회계통계표 등 자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1.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중국측투자자가 보관하고 중국측투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주관부문이 지정한 기업에서 보관한다.

2. 외자기업은 기업심사비준기관이 지정한 단위에서 보관한다.

### 제3장 특별청산

**제35조** 기업심사비준기관이 특별청산을 비준한 날 또는 기업법에 의하여 파산령을 받은 날이 특별신청 개시일이다.

**제36조** 기업이 특별신청에 들어갈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이나 그가 위임한 부문이 중외투자자, 관련 기관의 대표, 관련 전문요원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7조** 청산위원회는 주임 1명을 두며 기업심사비준기관이나 그가 위임한 부문에서 지정한다. 특별청산기간에는 청산위원회 주임이 기업 법정대표의 직권을 행사하고 청산위원회가 의결기구 직권을 행사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 관련사무를 처리하고 그 활동을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한다.

**제38조** 청산위원회는 기업의결기구 회의와 채권자회의를 소집하고 청산 관련 구체사항을 토의할 수 있다.

**제39조** 모든 채권자는 다 채권자회의 구성원이며 채권자회의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재산담보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권한을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권자회의 대표는 기업심사비준기관이나 그가 위임한 부문이 유권 채권자중에서 지정한다.

**제40조** 채권자회의는 청산위원회가 소집한다. 청산위원회는 채권자회의 소집 15일전에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자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채권자회의는 하기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자가 제공한 채권 관련 증명자료, 채권액수 및 담보상황을 심사한다.

2. 채무 변제상황을 파악하고 청산위원회에 청산안 및 채무 변제 상황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을 제출한다.

**제42조** 청산위원회가 제정한 청산안과 작성한 청산보고서는 기업 심사비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특별청산에 대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방법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장 벌칙 책임

**제44조** 청산기간에 기업이 신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기관이 그 시정을 명하고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5조** 기업이 본 방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들 내지 않거나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등록기관이 그 시정을 명하고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6조** 중외투자자가 본 방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산기간에 기업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이 처분한 재산의 원상복구 혹은 반환을 명하고 손해들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7조** 청산위원회가 본 방법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보고서를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지 않고 기업등록기관에 보고하지 않거나 청산보고서에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중대한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 기업등록기관이 그 시정을 명한다.

청산위원회가 본 방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 등록말소 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등록기관이 그 영업허가증을 회수하여

공고한다.

**제48조** 기업이 청산기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명세서에 허위기재하거나, 청산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기업채무들 변제하기 전에 기업의 재산을 배분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 기업등록기관이 그 시정을 명하고 기업등록기관에서 기업이 은닉한 재산 또는 기업의 채무들 완전히 변제하기 전에 배분한 기업재산액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책임이 있는 요원에게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9조** 청산위원회 구성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로 불법소득을 취득했거나 기업의 재산을 침점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 기업등록기관이 침점한 기업재산의 반환을 명하고, 기업등록기관이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5장 부 칙**

**제51조** 본 방법은 반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3.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시행 시 심리중인 기업파산 안전에 대한 법률적용 약간 문제 규정

(2007년 4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25차 회의통과)

法释 [2007] 10号

####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공고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실행 시 심리중인 기업파산 안전에 대한 법률적용 약간 문제 규정》은 2007년 4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25차 회의에서 통과하여 이를 공포하며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4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의 정확한 적용을 위하여 인민법원에 기업파산법 시행 전에 수리된 안전 중 법률 시행 시 기업파산 판결이 끝나지 않은 안전에 대한 구체적 법률적용 문제들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채권자, 채무자 또는 출자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정리절차(重整) 또는 화의신청이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면 인민법원은 수리하여야 한다.

(1) 채권자가 파산청산을 신청한 안전으로서, 채무자 또는 출자자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이미 정리절차 신청을 제출했고, 또한 기업파산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2) 채권자가 파산청산을 신청한 안전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기전에 이미 정리절차 신청을 제출했고, 또한 채권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정리절차들 신청하는데 대한 기업파산법의 관

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3) 채무자가 파산청산을 신청한 안전으로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  
들 받기전에 정리절차 신청을 제출했고, 또한 채무자가 직접 인민법  
원에 정리절차들 신청하는데 대한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4) 채무자가 기업파산법 제95조 규정에 근거하여 화의를 신청한  
경우.

**제2조** 청산팀이 기업파산법 시행 전에 계약내용을 완전히 이행하  
지 않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계속 이행에 대한 통  
지나 회답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상황에선느 기업파산법 시행일로  
부터 계산하여 당해 법의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통지  
또는 회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이미 청산팀이 설립되어 있으면 기업파산법 시행 후 인민  
법원은 당해 청산팀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직 청산팀이 설립되지 않았으면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과 《최  
고인민법원의 기업파산안전 심리 시 관리인 지정에 대한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제4조** 채권자가 채권 채무의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업파산  
법 제40조 규정의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 단 기업파산법 시행 전에  
이미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상제한 것은 제외한다.

**제5조** 변제하지 않은 파산 비용은 기업파산법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로 구분하여 기업파산법 제4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변제해야 한다.

**제6조**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  
파산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채권이자들 확정해야 한다. 이미  
파산을 선고한 경우에는 기업파산법 시행전의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채권이자들 확정한다.

**제7조** 채권자가 이미 인민법원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는 인민법  
원이 관련 신고 자료들을 관리인에게 교부한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직접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채권자가 인민법원에서 확정된 채권을 신고기간 내 인민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업파산법 제5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충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9조** 채권자가 채권포에 기재한 채권에 이의가 있어 파산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21조와 제5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단, 인민법원이 이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재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채권자가 채권분쟁으로 채무자들 기소하여 채무자가 상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채권자에게 그 소송청구들 채권확인으로 변경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제10조** 채무자의 종업원이 리스트에 기재된 것에 이의가 있어 파산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21조와 제4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단 인민법원이 이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재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재산담보가 있는 채권자가 우선 배상의 권리들 포기하지 않은 경우 기업파산법 제61조 제1항 제7호, 제10호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당해 채권자가 기업파산법 시행 전에 이미 표결이 된 사항에 대하여 표결권의 행사들 주장하거나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회의 결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채권자가 채권자회의 결의가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그 이익에 손해들 주었다고 판단하여 인민법원에 당해 결의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며, 아직 재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6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정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채권자가 재산분배 방안에 대한 재정에 불복하여 고소(申訴)들 한 경우에는 상급 인민법원은 고소절차에 따라 계속 심리한다. 기업파산법 시행 후 고소들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6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심을 신청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인민법원의 채무자의 재산관리방안에 대한 재정 또는 파산재산 평가방안에 재정에 불복하여 파산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



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6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재정에 이의가 있어 고소들 한 경우에는 상급인민법원이 고소절차에 따라 계속 심리한다. 기업파산법 시행 후 고소들 제기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기업파산법 시행 후 파산인의 종업원이 기업파산법 제13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권리들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허가해야 한다.

**제15조** 파산인이 동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급여들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파산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본 규정 시행 전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관련 사법해석이 본 규정과 조촉될 경우 인민법원은 아직 심리가 종결되지 않은 기업파산 안전에 더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기업파산안건 심리 시 관리인 지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07년 4월 4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22차 회의 통과  
法釋 [2007] 8호

####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기업파산안건 심리 시 관리인 지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2007년 4월 4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2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포하며,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4월 12일

기업파산안건을 공정하게 심리함으로써 파산 재판업무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관리인 제도의 완비와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 1. 관리인 명부의 제정

**제1조** 인민법원이 기업파산안건을 심리 시에는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기업파산법과 이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 관리인은 관리인 명부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제2조** 고급인민법원은 본 관할구의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 및 전직 종업인원 수와 기업파산안건 수량에 따라 본 원 또는 산하 중급인민법원에서 관리인 명부를 작성하는 가를 결정한다.

인민법원은 사회중개기구 관리인 명부와 개인 관리인 명부를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직할시 외의 고급인민법원이 작성한 관리인 명

부에는 사회중개기구와 개인이 소속한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명시해야 한다.

**제3조** 기업파산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사회중개기구 및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또한 직무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리인 명부에 편입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기구관리인 명부에 편입된 사회중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고 전문 지식을 갖추고 아울러 직무자격을 취득한 자는 개인 관리인 명부에 편입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사회중개기구 및 개인이 관리인 명부에 편입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역의 관리인 명부들 작성하는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인민법원이 심사 결정한다.

인민법원은 타 지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단, 타 지역의 중개기구가 본 관할지역 내에 분지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5조** 인민법원은 본 관할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매체들 통해 관리인 명부의 작성과 관련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관리인의 신고자료
- (2) 제출해야 하는 서류
- (3) 평가기준과 절차
- (4) 관리인의 직책 및 상응한 법적 책임
- (5)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마지막 일시
- (6) 인민법원이 공시를 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6조**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가 관리인 명부에 편입될 것을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의 서류들 제출해야 한다.

- (1) 직무증서, 법적 설립 비준문서 또는 영업집조
- (2) 정관
- (3) 본 단위의 전직 종업인원 명부 및 그 직무자격증서 사본
- (4) 업무 및 실적 자료
- (5) 업종 자율조직이 그가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과 행정처벌이나 기율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6) 인민법원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7조** 파산청산사무소가 관리인 명부에 편입될 것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자료들 제공해야 한다.

(1) 영업집조 또는 법적 설립 비준문서

(2) 본 단위 전직 종업인원의 법률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서, 또는 경영관리 경력에 대한 증명자료

(3) 업무 및 실적 자료

(4) 독자적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증명자료

(5) 업종 자율조직이 그가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과 행정처별이나 기율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6) 인민법원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8조** 개인이 관리인 명부에 편입될 것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자료들 제공해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집무증서 사본 및 집무 연한증명

(2) 관리인 자격취득에 대한 소재 사회중개기구의 동의 문서

(3) 업무 특장과 관련 실적 자료

(4) 집무 책임보험 증명

(5) 업종 자율조직이 그가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과 행정처별이나 기율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6) 인민법원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9조** 사회중개기구 및 개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집무, 경영 과정에서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행위로 행정기관, 감독관리기구 또는 업종 자율조직으로부터 행정처별이나 기율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 범죄 혐의로 관련 부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3) 직무의 수행이 적절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지정을 거절한 등 원인으로 인민법원으로부터 관리인 명부에서 제명당했고 그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4) 관리인을 담당하는데 갖추어야 할 전문능력이 부족한 경우
- (5) 민사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 (6) 인민법원이 관리인 직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제10조** 관리인 명부를 작성하는 인민법원은 전문 평의위원회들 묶어 관리인명부에 편입할 사회중개기구와 개인 명단을 결정해야 한다. 평의위원회 구성원은 최소 7명으로 한다.

인민법원은 본 관할구의 사회중개기구 및 사회중개기구 중 개인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고 그 직무 실적, 능력, 전공수준, 사회중개기구의 규모, 기업파산안전의 처리경험 등 요소들 결부시켜 관리인에 대한 평의기준을 제정해야 하며, 평의위원회는 신청인의 구체 상황에 따라 그 종합 점수를 결정한다.

인민법원은 평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초보적 심사를 거친 관리인 명부를 확정한다.

**제11조** 인민법원은 초보적인 심사를 거친 관리인 명부를 본 관할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매체를 통해 공시해야 하며, 공시 기간은 10일로 한다.

초보적인 심사를 거친 관리인 명부에 대해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심사를 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고 신청인이 관리인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을 초보적 심사를 거친 관리인 명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제12조** 공시 기간이 만료된 후 인민법원은 관리인 명부를 심사 확정함과 아울러 전국에서 영향력을 가진 매체에 공시하며, 동시에 급별로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13조** 인민법원은 본 관할구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단계별로 관리인 명부에 편입된 사회중개기구와 개인을 확정할 수 있다.

관리인 명부를 작성하는 모든 자료는 보관서류로 철하여 검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인민법원은 기업파산안건의 수리상황, 관리인의 직무 수행 및 관리인 자격의 변화 등 요소에 근거하여 관리인 명부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관리인 명부에 새로 편입된 사회중개기구와 개인은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이 기업파산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정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들 관리인 명부에서 제명해야 한다.

## **2. 관리인의 지정**

**제15조** 기업파산안건을 수리하는 인민법원이 관리인을 지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본 지역의 관리인 명부에서 지정해야 한다.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전국범위 내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분산된 기업파산안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소재지역 고급인민법원이 작성한 관리인 명부 중 기타 지역의 관리인 또는 타지역 인민법원이 작성한 관리인 명부에서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기업파산안건을 수리하는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관리인 명부 중의 사회중개기구들 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17조** 사실이 분명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명료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기업파산안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관리인명부 중의 개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 기업파산안건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청산팀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파산신청을 수리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팀이 구성되었고 인민법원이 이 규정 제19조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기업파산법 제133조에서 규정한 안건을 심리하는 경우
- (3) 관련 법률이 기업파산 시 청산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 (4) 인민법원이 청산팀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제19조** 청산팀이 관리인으로 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부 관련 부서, 관리인 명부에 편입된 사회중개기구, 금융자산관리회사 중에서 청산팀 구성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민은행과 금융감독관리기관은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청산팀에 요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관리인 명부에 열거한 명단에 따라 순번 또는 추천 등 무작위 방식을 통해 관리인을 공개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21조**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나 전국 범위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분산된 기업파산안전에 대해 인민법원은 공시 방식을 취하여 각지 인민법원의 관리인 명부에 편입된 사회중개기구들 요청하여 경쟁에 참여하도록 하고 경쟁에 참여한 사회중개기구 중에서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경쟁에 참여하는 사회중개기구는 최소 3개여야 한다.

경쟁방식을 통해 관리인을 지정 시 인민법원은 전문 평의위원회들 구성해야 한다.

평의위원회는 안전의 특징에 결부하여 사회중개기구의 전공수준, 경험, 기구규모, 초보적인 전적 등 요소들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경쟁에 참여한 사회중개기구 중에서 우수한 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평의위원회는 1/2 이상으로 통과하는 방식으로 사회중개기구들 지정해야 한다.

경쟁방식을 통해 관리인을 지정 시 인민법원은 1개 내지 2개의 사회중개기구들 후보자로 확정하여 필요시 관리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2조** 행정정비, 청산을 거친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파산안전에 대해 인민법원은 이 규정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하는 외에 금융감독관리기구가 추천한, 관리인 명부에 편입된 사회중개기구 중에서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 사회중개기구, 청산팀의 구성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므로 그 관리인의 충실한 직무 수행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24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이해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

(1) 채무자, 채권자와 미결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2)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는 3년 전에 채무자에게 상대적인 고정 중개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3) 현재 또는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는 3년 전에 채무자, 채권자의 최대 주주 또는 지분의 실제 통제인이었을 경우

(4) 현재 담당하거나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수리하는 3년 전에 채무자, 채권자의 재무고문, 법률고문을 담당했을 경우

(5) 인민법원이 그 관리인의 충실한 직무 수행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상황.

**제24조** 청산팀 구성원의 파견자, 사회중개기구의 파견자, 개인 관리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므로 그 관리인의 충실한 직무 수행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파산법 제24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이해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

(1) 이 규정 제23조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2) 현재 담당하거나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수리하는 3년 전에 채무자, 채권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을 담임했을 경우

(3)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최대 주주,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과 부부, 직계 혈족, 3대 이내의 방계 혈족 또는 사돈 관계가 있는 경우

(4) 인민법원이 그의 공정적인 관리인 직책 수행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제25조** 관리인 지정절차에 들어간 후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존재함을 느꼈을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함과 아울러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상황 설명을 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을 본안의 관리인으로 지정하지 못한다.



**제26조**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이 중대한 채무분쟁이 있거나 불법 혐의로 인해 관련 부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을 본안의 관리인으로 지정하지 못한다.

**제27조** 인민법원이 관리인을 지정 시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관리인으로 지정된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 파산신청인, 채무자, 채무자의 기업등록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결정서는 파산신청을 수리한 민사재정서와 함께 공시해야 한다.

**제28조**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인민법원의 지정을 거절하지 못한다.

관리인이 일단 지정되었다면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관리인이 수행할 일부 또는 전부의 직책을 기타의 사회중개기구 또는 개인에게 맡겨서는 아니된다.

**제29조** 관리인은 관리인 지정결정서를 지참하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인 인장을 새기고 인민법원에 인감을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관리인 인장은 해당 파산업무에만 사용된다. 관리인이 기업파산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집무를 중지한 후에는 관리인 인장을 공안기관에 반납하여 소각해야 하며, 그 소각증명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기업파산안건을 수리하는 인민법원은 관리인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료를 기업파산안건 서류에 첨부하여 채권자회의 또는 채권자위원회에서 사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관리인의 경결

**제31조** 채권자회의가 기업파산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경결할 경우에는 채권자회의에서 의결하고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채권자회의 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인에게 통지하여 2일 내에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32조** 인민법원은 신청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 시 관리인의 서면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지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리인의 경질 신청 이유가 성립된다고 인정 시에는 관리인의 서면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관리인을 경질하는 결정을 지어야 한다.

**제33조** 사회중개기구 관리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회의의 신청에 의해 또는 자신의 직권에 따라 직접 관리인을 경질할 수 있다.

(1) 집무허가증 또는 영업집조가 회수 취소되었거나 말소되었을 경우

(2) 해산, 파산사유가 출현했거나 집무 책임리스크 부담능력을 잃은 경우

(3)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직무를 수행 시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권자의 이익에 피해를 조성했을 경우

(5) 이 규정 제26조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청산팀 구성원은 전항의 규정을 참조 적용한다.

**제34조** 개인관리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회의의 신청에 의해 또는 자신의 직권에 따라 직접 관리인을 경질할 수 있다.

(1) 집무자격이 취소 또는 말소되었을 경우

(2)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직무를 수행 시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권자의 이익에 피해를 조성했을 경우

(4) 실종, 사망했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잃었을 경우

(5) 건강 원인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6) 집무 책임보험이 실효한 경우

(7) 이 규정 제26조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청산팀 구성원의 파견자, 사회중개기구의 파견자는 전항의 규정을 참조 적용한다.

**제35조** 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할 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이유의 인정은 이 규정 제33조, 제34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참조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 인민법원이 관리인의 사직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여전히 사직하고자 하는 동시에 관리인의 직책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리인을 경질해야 한다.

**제37조** 인민법원이 관리인을 경질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 관리인은 결정서를 받은 이튿날부터 인민법원의 감독하에서 신임 관리인에게 모든 자료, 재산, 영업사무 및 관리인 인장을 인수인계해야 하며 동시에 신임 관리인에게 업무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관리인이 상기 직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신임 관리인은 관련 업무들 직접 인수할 수 있다.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원 관리인은 수시로 그 관리인의 직책 수행상황에 대한 신임 관리인, 채권자회의, 인민법원의 질문에 협조해야 한다.

**제38조** 인민법원이 관리인을 경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원 관리인, 신임 관리인, 파산신청인, 채무자 및 채무자의 기업등록기관에 송달하고 이들 공시해야 한다.

**제39조** 관리인의 사직 신청이 인민법원의 허가받지 못했으나 여전히 사직을 견지하고 관리인의 직책을 더는 수행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이 관리인을 경질하기로 결정한 후 원 관리인이 신임 관리인에게 관련 업무들 인수인계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130조의 규정과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관리인에게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다. 사회중개기구 관리인에 대한 벌금은 인민폐 5~20만 위안이고, 개인 관리인에 대한 벌금은 인민폐 1~5만 위안이다.

관리인이 전항에서 규정한 행위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인민법원의 지정을 거절할 경우 관리인 명부를 작성한 인민법원은 그

관리인 자격을 1~3년간 정지시키거나, 또는 관리인 명부에서 계명한다.

**제40조** 관리인이 벌금 결정에 불복 시에는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 인민법원은 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결정함과 아울러 재의결과를 하급 인민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5. 기업파산안건 심리 시 관리인의 보수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07년 4월 4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22차 회의 통과  
法釋 [2007] 9호

###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기업파산안건 심리 시 관리인의 보수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2007년 4월 4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2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포하며,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4월 12일

기업파산안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리하고 관리인의 보수를 확정하는 인민법원의 업무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관리인은 기업파산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응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관리인의 보수는 기업파산안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이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2조**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최종 변제한 재산가치의 총액에 따라 아래의 비율 범위 내에서 누진 방법으로 관리인의 보수를 확정한다.

(1) 100만 위안(본수 포함, 이하 동일) 미만인 경우 12% 이하로 확정한다.

(2) 100만 이상, 500만 위안의 부분은 10% 이하로 확정한다.

(3) 500만 이상, 1,000만 위안의 부분은 8% 이하로 확정한다.

(4) 1,000만 이상, 5,000만 위안의 부분은 6% 이하로 확정한다.

(5) 5,000만 이상, 1억 위안의 부분은 3% 이하로 확정한다.

(6) 1억 이상, 5억 위안 이하의 부분은 1% 이하로 확정한다.

(7) 5억 이상의 부분은 0.5% 이하로 확정한다.

담보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될 받은 담보물의 가치는 전항에서 규정한 재산의 가치총액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고급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상기 비율을 참조하여 30%의 변동 폭 내에서 당지 실정에 맞는 관리인의 보수비율 제한 범위들 제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당지에서 영향력이 있는 매체들 통해 공시하고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3조** 인민법원은 파산안건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분할 또는 1차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리인의 보수들 확정할 수 있다.

**제4조** 인민법원은 기업의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재산가치와 관리인의 작업량을 산정하고 관리인에 대한 초보적인 보수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관리인의 보수방안에는 관리인의 보수비율과 수령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5조** 인민법원이 공개 경쟁방식을 통해 관리인을 지정 시에는 사회중개기구가 제시한 견적에 따라 관리인의 보수방안을 확정할 수 있다. 단, 그 보수비율은 이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제한적 범위들 초과하지 못한다.

상기 보수방안은 일반적으로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권자 회의에서 이의가 성립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6조** 인민법원은 관리인의 보수방안을 확정 한 날로부터 3일 내에 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관리인은 제1차 채권자회의에서 관리인 보수방안의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제7조** 관리인과 채권자회의 간에 관리인의 보수방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협상을 할 수 있다. 쌍방이 관리인의 보수방안을 조정할 데 대해 합의들 달성했을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구체적 요구와 이유들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며, 동시에 채권자회의의 관련 결의들 첨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사들 거쳐 상기 요구와 이유가 법률과 행정법규의 강제적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또한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도 피해

를 주지 않는다고 인정 시에는 쌍방의 합의 결과에 따라 관리인의 보수방안을 조정해야 한다.

**제8조** 인민법원은 관리인의 보수방안을 확정 한 후 파산안건과 관리인이 직책을 수행한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관리인의 보수방안을 조정 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채권자위원회 또는 채권자회의 주식에게 관리인의 보수방안 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인민법원이 관리인의 보수방안을 확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들 감안해야 한다.

- (1) 파산안건의 복잡성
- (2) 관리인의 근면정도
- (3) 정리절차, 화의작업에 대한 관리인의 실제 공헌
- (4) 관리인이 부담하는 리스크와 책임
- (5) 채무자 소재지 주민의 가처분 소득과 물가수준
- (6) 관리인의 보수에 영향을 주는 기타 상황.

**제10조** 최종 확정 한 관리인의 보수와 수령 상황은 파산재산의 분배방안에 넣어야 한다. 화의, 정리절차 중 관리인의 보수방안의 내용은 화의합의서 초안 또는 정리절차 계획 초안에 넣어야 한다.

**제11조** 관리인이 보수들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보수들 지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 (2) 보수 수령을 신청한 일자와 액수
- (3) 관리인의 직책 수행 상황.

인민법원은 상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액수들 확정해야 한다.

**제12조** 관리인의 보수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채무자의 재산으로 관리인의 보수와 관리인의 직책 수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어려울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파산절차의 종료를 신청해야 한다. 단 채권자, 관리인, 채무자의 출자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상기 보수와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상기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파산비용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출하며 수시로 상환한다.

**제13조** 관리인이 담보물의 보관, 현금화, 교부 등 관리에서 합리적인 용역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담보권자로부터 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관리인과 담보권자 간에 상기 보수의 액수에 대해 합의가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확정할 수 있되, 보수비율은 당해 조항에서 규정한 제한적 범위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4조**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가 해당 전공의 기타 사회중개기구나 인력을 초빙하여 관리인의 직책 수행을 협조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신의 보수에서 지급해야 한다.

파산청산사무소가 기타 사회중개기구나 인력을 초빙하여 관리인의 직책 수행을 협조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신의 보수에서 지급한다.

**제15조** 청산팀 중 관련 정부부서에서 파견한 업무직원은 보수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기타 기관 또는 인원의 보수는 그 직책의 수행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제16조** 관리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민법원은 변경 전후의 관리인의 보수를 별도로 계산하며, 그 총적 보수비율은 이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제한적 범위들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조** 채권자회의가 관리인의 보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구체적인 요구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 의서에는 관련 채권자회의 결의들 첨부해야 한다.



**제18조** 인민법원은 채권자회의 이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리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공청회를 소집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채권자회의 이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관리자의 보수 조정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관리인, 채권자위원회 또는 채권자회의 주석에게 통지해야 한다.

#### <집필자 소개>

##### **베이징 马林江 법률사무소**

베이징 마린장 변호사 사무소는 한·중 대형기업의 전문법률기구로서 외국인 투자, 다국적 기업인수와 합병, 한국 증권 및 금융시장, 부동산 프로젝트개발, 국제무역, 회사의 법률고문, 각종 민·상사 분쟁해결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실천을 통하여 쌓은 경험으로 금융과 투자, 국제무역, 중재와 소송, 부동산과 건설, 회사 법률사무, 증권법률 서비스업무, 자산처분 및 채무정리 관련 법률사무, 지적재산권 분야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투자, 부동산, 매체, 음원, 무역, 은행, 영화, 서비스 분야에서 베이징 마린장 변호사사무소는 능률적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연락처 : 010-85910091 / 85910093

E-mail : [malinjiang66@yahoo.com.cn](mailto:malinjiang66@yahoo.com.cn)

<http://www.mljlw.com.cn>

주소: 北京市朝阳区东三环中路9号富尔大厦1808室

